

IBKS ESG Collabo Report

금융권도 우는 출산율

리서치본부장
인터넷/게임

이 승 훈

02) 6915-5680
dozed@ibks.com

유통·식자재/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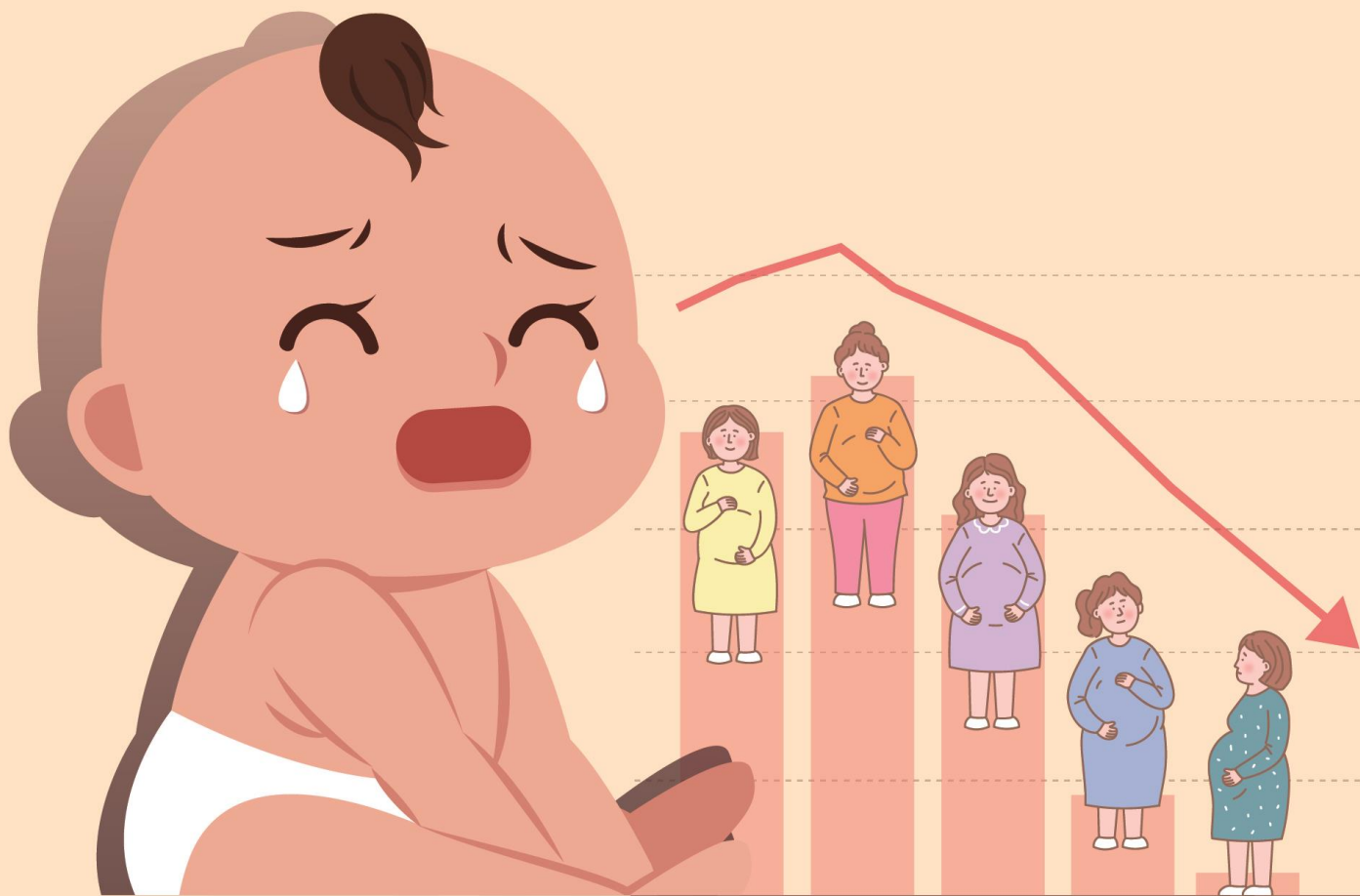
남 성 현

02) 6915-5672
rockrole@ibks.com

RA

박 은 명

02) 6915-5527
eunp9622@ibks.com



CONTENTS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저출산.....	3
해외 주요 국가의 인구 문제의 원인 및 정책.....	5
1.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 진입	8
2. 저출산과 고령화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9
3. 국내 인구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28
4. 저출산 탈피 정책 확대 필요성: 민간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	45
5.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제안.....	53
결론을 내리며... 저출산은 긴 호흡, 단기적으로 고령화 소비에 대한 고민 시작 ..	62
별첨 1. 프랑스	63
별첨 2. 일본.....	66
별첨 3. 대만.....	68



국가 존속을 위협하는 저출산

- 1) 글로벌 인구 문제
- 2) 국가별 저출산 원인·정책 비교
- 3) 한국 저출산 원인 심층분석
- 4) 정책적 제안 및 투자아이디어

본 보고서는 2024년 유엔 세계인구전망 보고서, OECD 15개국의 정책 비교, 일본·프랑스·대만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전략과 고령화 대응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1) 글로벌 인구 문제, 2) 주요 국가의 저출산 원인 및 정책 비교, 3) 한국 저출산의 원인 심층분석, 4) 정책적 제안 및 투자아이디어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지만, 세계적으로 공통된 구조적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

2023 년
한국 출산율 0.72 명,
실질적인 정책 필요

한국은 2023년 여성 1인당 0.72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국가 존속이 위협받는 수준에 직면했다. 이에 글로벌 주요 국가와의 인구 문제 비교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 차원 대응 체계 필요

그러나, 출산율 반등보다
하락 속도 지연이
현실적 목표

2100년 세계 인구 전망치는 10여 년 전보다 약 7억 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한국, 홍콩, 대만 등은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급감하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년부양비의 급증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대만 사례 분석 결과, 저출산은 경제, 사회 인식, 문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에 단일 정책보다는 재정, 인프라, 인식 개선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강력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인구 구조 관성으로 단기간 내 출산율 회복은 어렵고, 주요 국가들 역시 출산율 하락 속도를 다소 지연시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저출산 정책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오히려 인구 구조 변화로
고령화 산업에 주목

실질적으로 저출산 정책으로 인한 산업·기업의 수혜는 제한적이다.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로 인해 보육, 교육, 주거 등 전통적인 출산 장려 산업의 시장 확대 여력은 크지 않으며, 공공 서비스의 확장이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이들의 소비 여력 확대로 인해 헬스케어, 실버 레저, 고령자 맞춤형 주거 등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전략적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경제환경,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 필요성

- 1) 청년층 소득 수준 감소
- 2) 경제 여건 악화
- 3) 초혼 연령 상승
- 4) 생애주기·근속연수 미스매치
- 5)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

출산율 감소 주요 원인은 1) 청년층 소득 수준 감소, 2) 사회적 경제여건 악화(일자리 부족, 자본집약적 산업 구조), 3) 초혼 연령 상승, 4) 삶의 생애주기와 근속연수 미스매치, 5)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 등이다. 즉, 출산율은 경제활동 그리고 노동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
산업구조 분산을 통한
경제 여건 개선책이 요구됨

출산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추가적인 재정투자, 그리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당사에서는 산업구조 분산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적으로, 산업구조 분산을 통한 거주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 구조적 문제(저출산, 지방소멸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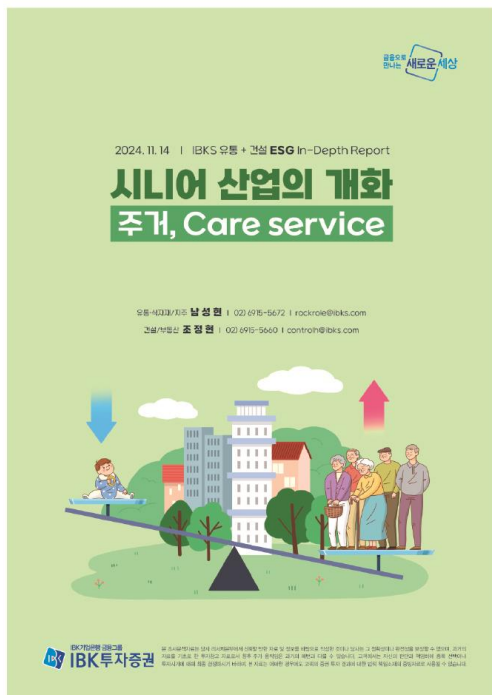
IBKS 저출산·고령화 선행 보고서



“당신의 가계경제는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6일 발간)

당사에서는 2023년 10월 16일 발간한 ‘당신의 가계경제는 안녕하십니까?’ 에서 우리나라 내수 소비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수 감소 시작, 고령화 시대 진입 두가지 변화를 제시하였다. 새로 개화하는 실버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의료 및 복지 시장의 팽창, 둘째, 개호식품 및 푸드테크 시장의 발전, 셋째, 대표적인 유통채널로써 근거리 채널의 부각 가능성 등 3가지로 제시했으며, 관련 수혜기업을 점검하였다.



“시니어 산업의 개화”

(2024년 11월 14일 발간)

이후 2024년 11월 14일 발간한 ‘시니어 산업의 개화’ 보고서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관련하여 국내 내수 소비시장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나아가, 의료·식품·주거 등 시니어 산업 전반에 관련하여 시니어 하우징 산업과 Care Service 시장에 주목하였다. 특히, 고령화 과정에서 고령 인구의 절대 수가 증가하며 나타나는 3가지 변화(첫째, 의료 및 복지 시장의 팽창, 둘째, 개호식품 및 푸드테크 시장의 발전, 셋째, 주거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 인구 문제의 원인 및 정책

표 1. 국가별 출산정책 정리(■ : 긍정적, ■ : 부정적)

구분	교육			노동					문화		주거			경제		
	공교육 비용	대학 등록금	경쟁강도 (사교육)	노동시간 (주당)	출산휴가 (일)	출산휴가 급여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율	이민자 비율	초혼 연령 (세)	주택구매 소요기간	수도권 거주비율	지니계수 (빈부격차)	GDP 대비 가족지출	1인당 GDP(달러)	5년 평균 경제성장률
캐나다	보통	높음	낮음	36.5	105	55%	63 주	40.4%	29.1%	31.5	9.9 년	38%	0.325	1.8%	53,431	2.5%
프랑스	매우 낮음	매우낮음	매우낮음	35.0	180 (남녀 각각)	100%	26 주 (남녀 각각)	14.5%	10.3%	35.6	12.8 년	18%	0.292	2.7%	44,691	1.2%
독일	매우 낮음	매우낮음	매우낮음	34.8	98	100%	44 주 (남녀 각각)	65.0%	14.9%	34.6	9.4 년	12%	0.294	2.4%	54,343	1.0%
이탈리아	보통	보통	낮음	39.5	150	80%	44 주	30.0%	8.7%	35.0	8.7 년	10%	0.331	1.4%	39,003	0.9%
일본	보통	보통	높음	42.0	98	일부지급	44 주	60.0%	2.5%	31.4	7.5 년	30%	0.334	1.7%	33,767	0.5%
대한민국	보통	보통	매우높음	46.5	90	100%	52 주 (남녀 각각)	52.4%	4.9%	33.7	16.6 년	50%	0.339	1.4%	33,121	2.1%
폴란드	매우낮음	낮음	매우낮음	38.5	140	100%	32 주	62.4%	1.5%	30.0		31%	0.274	3.0%	22,057	3.5%
스페인	낮음	보통	낮음	38.0	112	100%	156 주	0%	14.3%	34.0	11.1 년	14%	0.330	3.4%	33,509	2.4%
터키	낮음	보통	보통	45.5	112	미흡		0%	4.1%	28.0		20%	0.409	0.5%	13,106	5.2%
영국	높음	높음	높음	40.0	365		52 주	0%	14.8%	35.0	11.0 년	13%	0.350	2.4%	49,464	1.5%
대만	보통	낮음	매우높음	45.0	56	80%	미흡	0%	2.4%	30.4		30%	0.277		33,234	2.8%
호주	높음	높음	낮음	36.7	126	최저임금	2 년	46.1%	30.2%	30.5	14.4 년	20%	0.344	2.3%	64,821	2.2%
스웨덴	매우낮음	무상	매우낮음	36.0	480	약 80%	42.9 주 (남녀 각각)	57.1%	20.0%	35.2	11.2 년	24%	0.277	3.4%	55,517	1.5%
싱가포르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44.0	112	일부지급	미흡	0%	42.6%	30.3		100%	0.374		84,734	3.2%
헝가리	보통	보통	낮음	39.8	140	100%	156 주	40.4%	0.5%	30.0	11.6 년	30%	0.282	2.4%	22,142	3.8%

자료: OECD, UN, 언론보도, IBK 투자증권

주: 주택구매 소요시간은 가구 당 평균 가치분 소득 기준 주택 구매에 걸리는 시간



“편집상 공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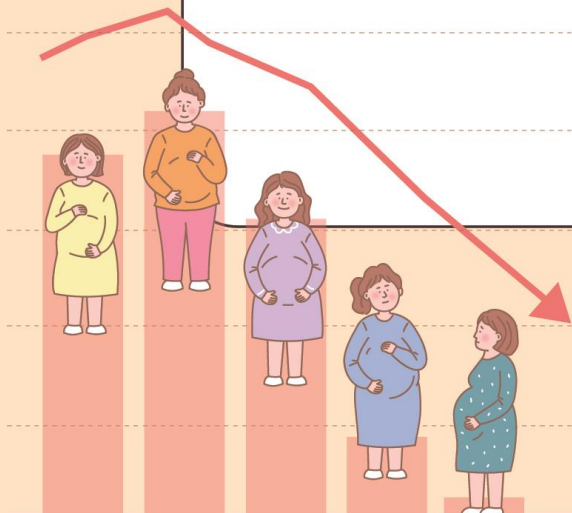
Chapter 01

리서치본부장
인터넷/게임

이승훈 연구위원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 진입

저출산과 고령화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1.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단계 진입

인구 통계 전환 모델

인구 통계적 전환 모델

- 1) 인구 구조
- 2)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 통계적 전환 모델(Demographic Transition Model, DTM)은 한 국가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겪으면서 출산율과 사망률, 그리고 인구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인구학적 이론이다. 각 단계는 인구 구조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한국은 이미 5 단계로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해 있다.

1 단계:
생존을 위한 다산(多産)

1 단계(전 산업사회):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매우 높아 인구 성장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으며, 생존을 위한 다산(多産)이 일반적이다. 현대에는 해당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중세 유럽이나 조선 전기와 같은 과거 사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2 단계:
사망률 급감, 인구 폭발

2 단계(산업화 초기): 위생과 의료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높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 단계의 국가는 대부분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

3 단계:
출산율 하락 시작

3 단계(산업화 후기):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사망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단계다. 도시화, 교육 확대, 여성의 사회 진출, 피임 보급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4 단계:
인구 증가율 정체.
고령화 시작

4 단계(탈산업사회):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성장이 정체되거나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는 단계이다. 생활 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시작되며,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5 단계:
고령화 심화

5 단계(인구 감소 단계):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단계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일본, 대한민국,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도 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인구 통계적 전환 모델

단계	출산율	사망률	인구 증가율	주요 특징 및 설명	대표 국가 예시
1 단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거의 없음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생존을 위해 다산이 일반적.	없음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음)
2 단계	여전히 높음	급격히 감소	급격한 증가	의학, 위생, 식량 공급 개선 → 사망률 급감. 출산율은 여전히 높음 → 인구 폭발	일부 저개발국 (예: 니제르)
3 단계	점차 감소	낮음	증가하지만 둔화됨	도시화, 여성 교육 확대, 피임 보급, 경제 발전 → 출산율 하락 시작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 단계	낮음	낮음	거의 없음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낮음. 인구 증가율 정체. 고령화 시작. 경제 고도 발전 상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5 단계	매우 낮음 또는 초저출산	낮음 또는 다소 증가	감소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음 → 자연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제활력 저하 가능성, 인구 유입 필요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 투자증권

2. 저출산과 고령화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저출산 (Low Fertility)

출산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은 현상을 의미.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를 저출산으로 간주

UN의 글로벌 인구 통계를 분석

UN, 전세계 인구
103억 명 전망(2080년)

유엔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앞으로 50~6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기준 약 82억 명인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약 103억 명에 이르러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2100년경에는 다시 약 102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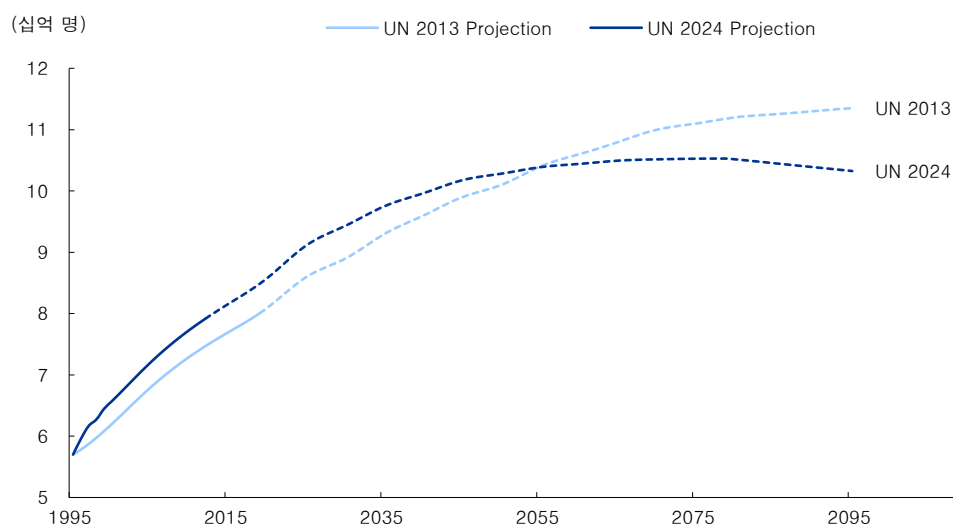
인구 정점이 더 빠르게,
더 낮은 수준에서
도달할 것으로 전망

유엔은 21세기 안에 인구가 정점에 도달할 확률을 약 80%로 분석했다. 과거 유엔은 2013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는 세계 인구 증가가 이번 세기 안에 멈출 확률이 약 30%로 추정했다. 2100년의 예상 인구 규모는 10년 전 전망보다 약 6% 낮은 수준, 즉 약 7억 명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정점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낮은 수준에서 도달하게 된 원인은 1) 중국 등 일부 대규모 국가에서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했고,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출산율 하락 속도가 다소 빨라졌기 때문이다.

인구 급증의 시대,
일단락

최근 연구 결과와 10년 간의 연구 결과 차이를 통해서 우선 1800년대 초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중반 전 세계로 확산된 인구 급증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인구 정점이 더 낮고 빠르게 도달하면 인류가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는 식량, 주거, 인프라, 서비스 등 전반적인 경제 수요를 증가시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림 1. UN 글로벌 인구 추이 및 전망(1995~2100년)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2024년부터 2100년 수치는 UN 전망치

유럽, 동아시아는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

국가별 인구 정점 시기 차이:
유럽·북미 등, 1990년대
아시아·중남미, 2020년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인구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이미 인구 정점에 도달한 국가는 대부분 유럽, 북미,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속한다. 특히 1990년대에는 12개국 이상의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이 인구 정점에 도달했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졌다. 또한, 2020~2050년 사이에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인구 정점에 진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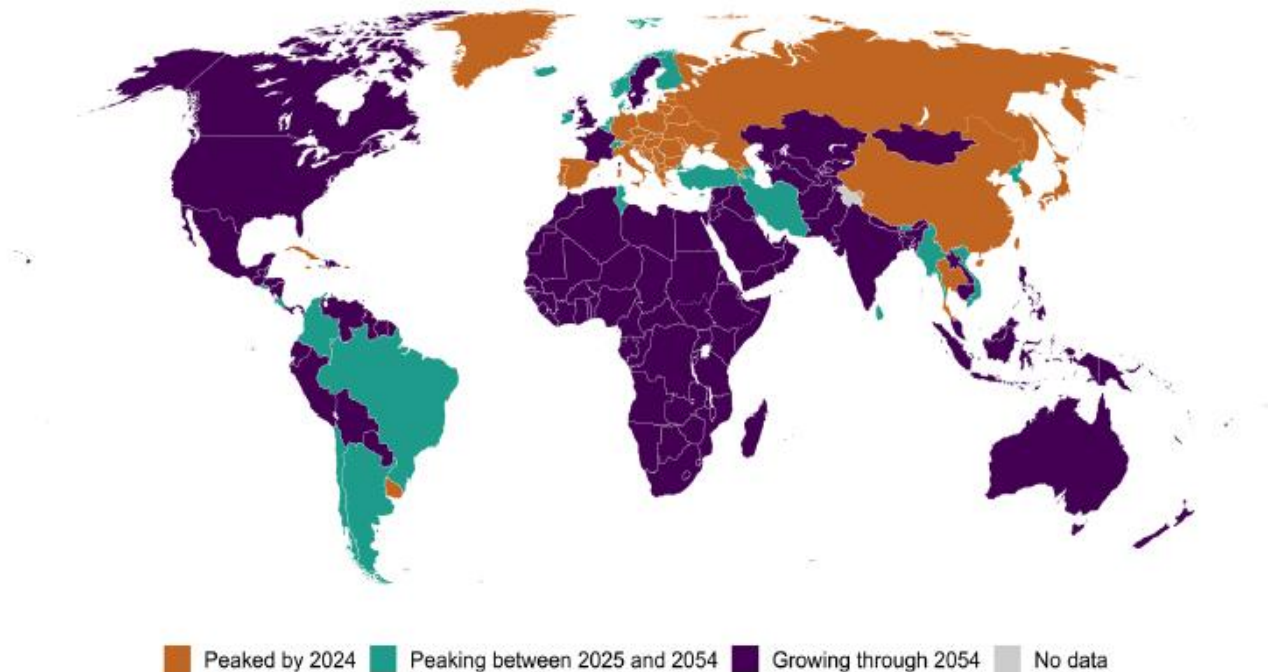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
인구 정점 도달할 것

한국, 중국, 태국, 쿠바, 우루과이 등은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가들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했으며, 경제 구조 전환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프리카 국가,
2100년 이후 정점 예상

끝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Sub-Saharan Africa)은 대부분 인구 정점이 2100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출산율이 여전히 높고, 인구 구성에서 청년층 비중이 크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 2. 국가별 인구 정점 도달 전망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주황색은 2024년에 인구 정점 도달, 초록색은 2025년에서 2054년 사이에 인구 정점 도달, 보라색은 2054년까지 계속 성장 전망을 의미, 회색은 데이터 없는 지역을 의미.

대체출산율 (Replacement Fertility Rate)

한 세대의 인구가 다음 세대에서도 동일한 규모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기준치.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2.1 명으로 계산

출산율 (Fertility Rate)

특정 인구 집단에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발생한 출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인구 1,000 명당 출생아 수)

계산식: (1년간 출생아 수 ÷ 전체 인구) × 1,000

예시: 2024 년 한국 4.7 명 / 1,000 명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 세) 동안 평균적으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의미.

특정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인구 구조나 크기와는 무관(1 명의 여성당 평균 출생아 수)

예시: 2024 년 한국 0.75 명

노년부양비 (Old-age Dependency Ratio)

생산가능인구(일반적으로 15~64 세)에 비해 65 세 이상 고령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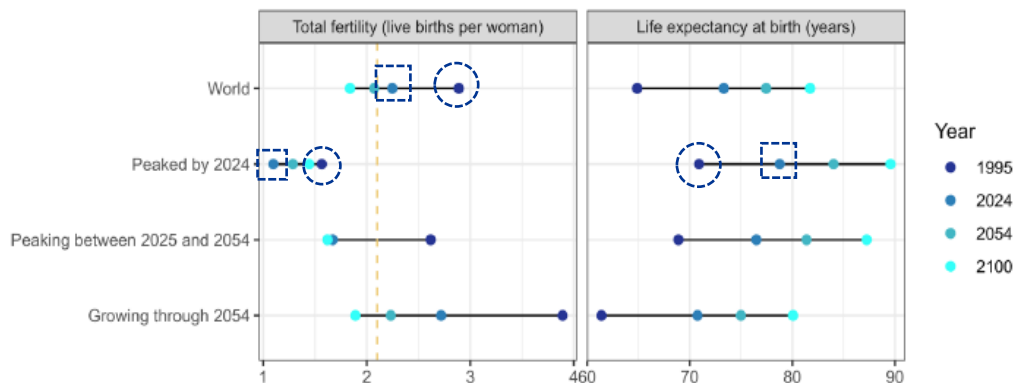
계산식: 노년부양비 = (65 세 이상 인구 ÷ 15~64 세 인구) × 100

예시: 2024 년 노년부양비 한국 25%, 일본 50%, 프랑스 33%, 중국 20%, 인도 10% 수준

전세계 평균 출산율 하락:
2.9 명(1990 년대)
→ 2.3 명(2024 년)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은 한 세대 전(1990 년대 중반)에는 여성 1 인당 약 2.9 명이었으나, 2024 년 현재 2.3 명으로 하락했고, 2040 년대 후반에는 대체출산율(2.1 명)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대수명은 모든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1995 년 약 66 세에서 2024 년 73 세, 2100 년에는 약 82 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2100 년경 평균 88 세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2100 년에는 평균 78 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치명적인 이유는 숫자의 감소보다 인구 변화의 방향과 그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노년부양비가 감당할 수도 없게 급증할 것이다.

그림 3. 인구 정점 시기별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0 세의 기대여명) 전망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2024 년, 2054 년, 2100 년 수치는 UN 전망치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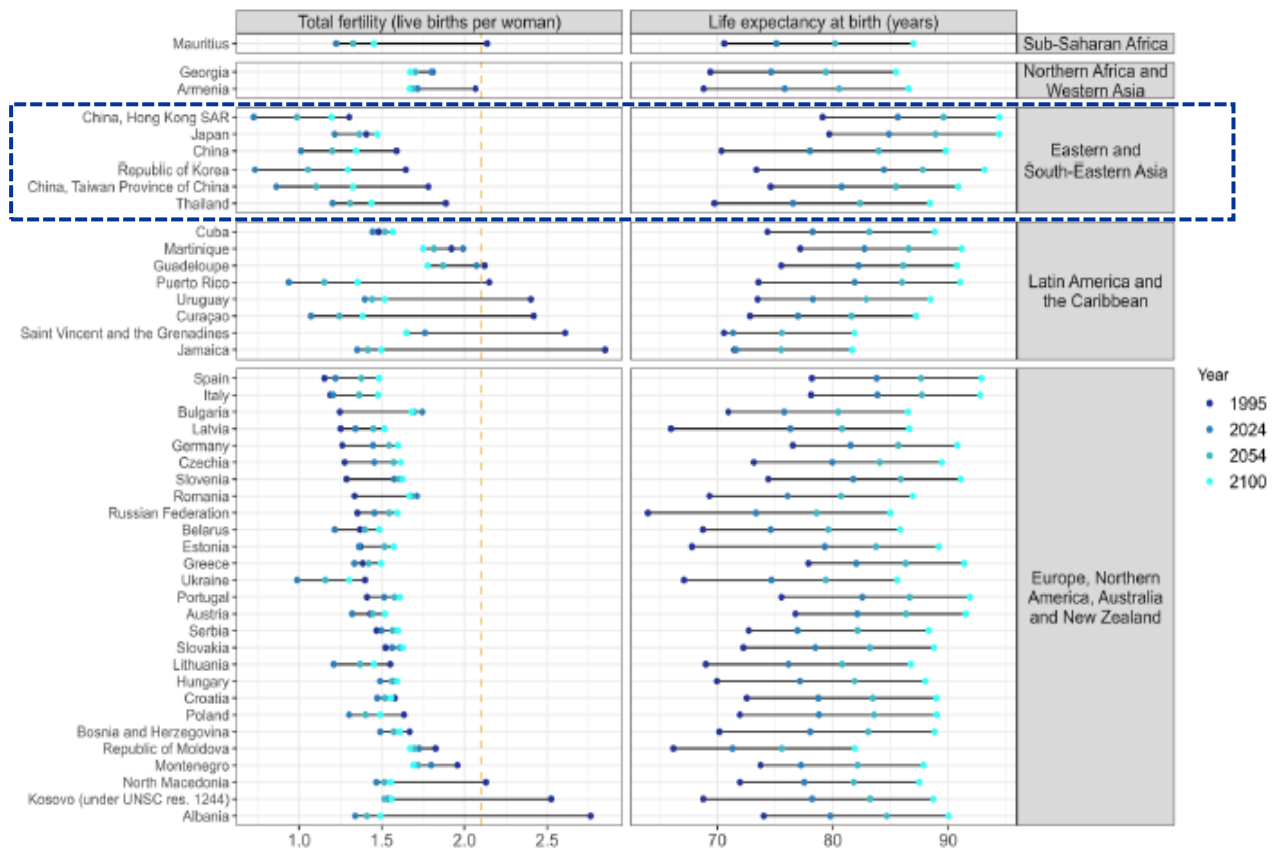
한국의 합계출산율:
1.6 명(1995 년)
→ 0.7 명(2023 년)
→ 1.2 명(2100 년 전망치)

합계출산율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대체출산율(2.1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일부 국가는 극심한 저출산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5 년 약 1.6 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최근 0.7 배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UN 보고서 전망치에서 2100 년까지도 1.2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다. 2024 년 중국, 한국, 대만은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반면, 기대수명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서부 국가들은 2100 년경 출생 시 기대수명이 90 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그림 4. 인구 정점 도달 국가별 합계출산율 및 기대수명 전망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2024 년, 2054 년, 2100 년 수치는 UN 전망치

인구구조

세계는 고령화 진행 중

전 세계적으로는 고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20~64 세)는 2040 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청소년층(0~19 세)은 이미 감소세에 들어섰다. 반면, 노년층(65 세 이상)은 2100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24 년 이전

인구 피크 도달 지역:
일본, 유럽 일부 국가

2024 년 이전 인구 피크 도달 지역은 주로 일본,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생산가능 인구와 청소년층 모두 감소세에 있다. 노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70 년 이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2054 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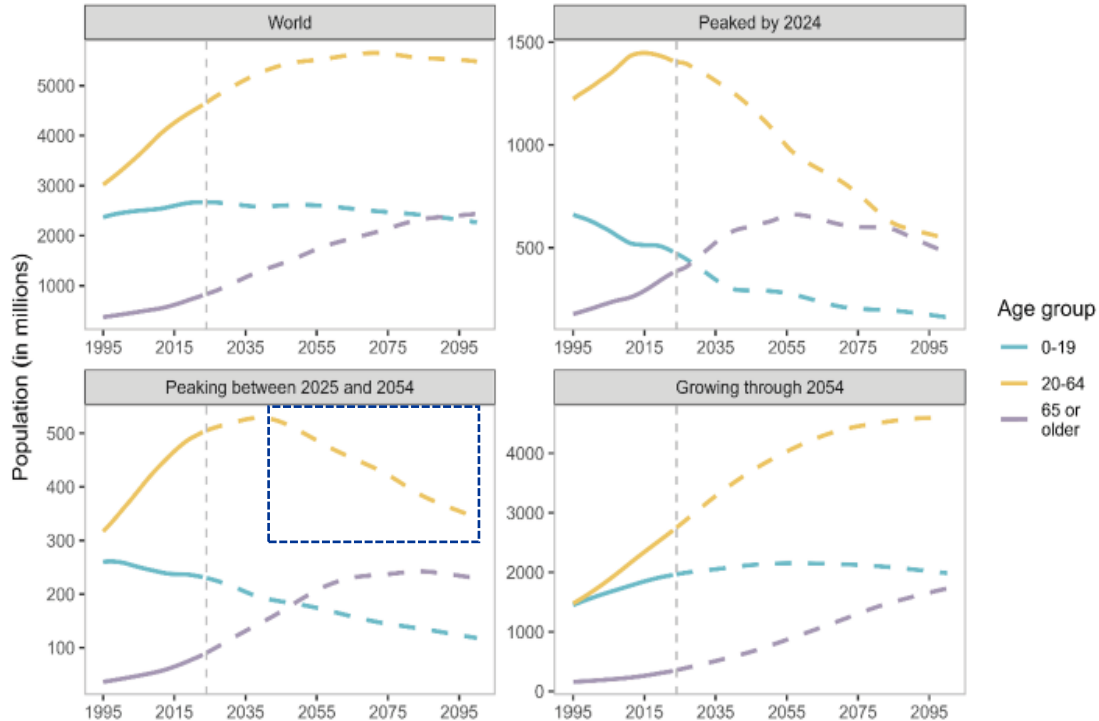
인구 피크 도달 지역: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2025~2054 년 사이 인구 피크 도달 예정 지역으로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인구 증가세에 있으나 머지않아 정점에 도달할 국가들이다. 청소년층은 이미 감소세에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는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 노년층은 빠르게 증가 중이다.

생산연령 인구: 15~65 세 (Working-age Population: Age 15~64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일반적으로 만 15 세에서 64 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

그림 5. 연령대별 인구 정점 도달 추이 및 전망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2024 년~2100 년 수치는 UN 전망치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 (Old-age Dependency Ratio)

생산가능인구(일반적으로 15~64세)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비율

계산식: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예시: 2024년 노년부양비 한국 25%, 일본 50%, 프랑스 33%, 중국 20%, 인도 1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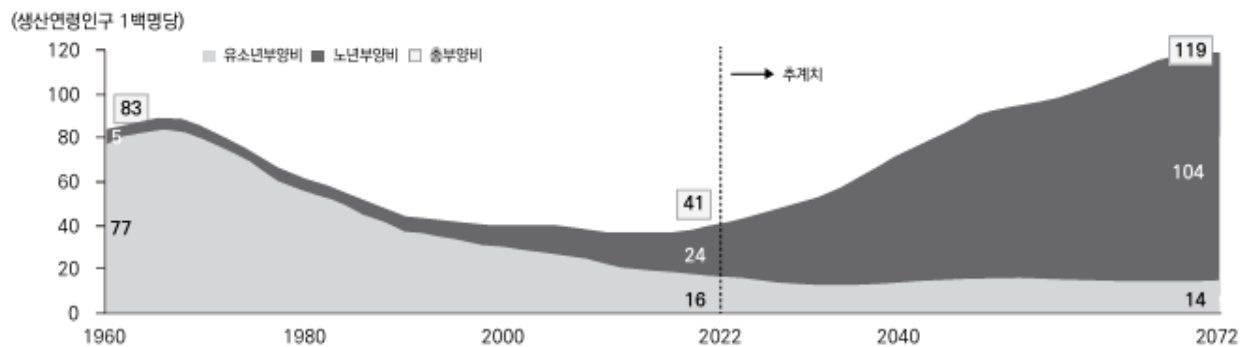
한국 노인 부양,
2072년에는 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 부양 필요

한국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년부양비(1백명당)는 2022년 24.8명에서 2030년 38.0명, 2040년 59.1명, 2050년 77.3명, 2060년 90.3명, 2072년 104.2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부양비 증가
→ 재정 압박 가중
→ 노동력 부족
→ 경제성장률 저하

이러한 부양비 증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중 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OECD 평균 57.3%의 절반에 불과하며, 전체 노인의 37.3%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완화되지 않았다.

그림 6. 부양비(노년부양비 및 유소년부양비) 추이 및 전망(1960~2070년)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주) 2022년~2072년 수치는 통계청 전망치

출산율 반등이 어려운 이유: 인구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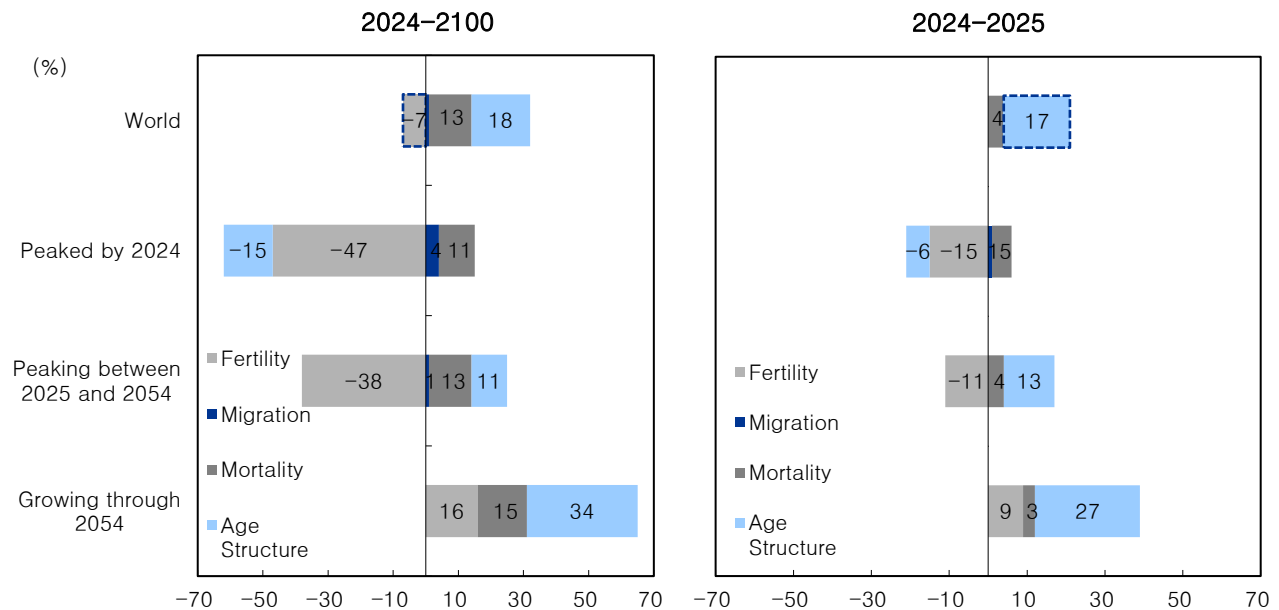
출산율,
연령구조(인구 모멘텀)
고려하면 급격한 반등 어려움

UN의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변화는 출산율(Fertility), 사망률(Mortality), 국제 이주(Migration), 그리고 과거의 세 요인의 변화가 누적된 연령 구조(Age Structure, 인구 모멘텀)라는 네 가지 주요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연령 구조(인구 모멘텀) 때문에 급격히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 반등 전략과 함께 인구구조 자체의 질적 개선을 야기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24~2054년
인구 증가 요인 1 순위:
연령 구조(17%)

전 세계적으로 2024년부터 2054년까지 연령 구조(17%)가 가장 큰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출산율의 기여도는 미미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미 대체수준(2.1명) 근처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210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낮은 출산율이 오히려 인구 감소 요인(-7%)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연령 구조(18%)는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인구 정점 시기별 인구 증감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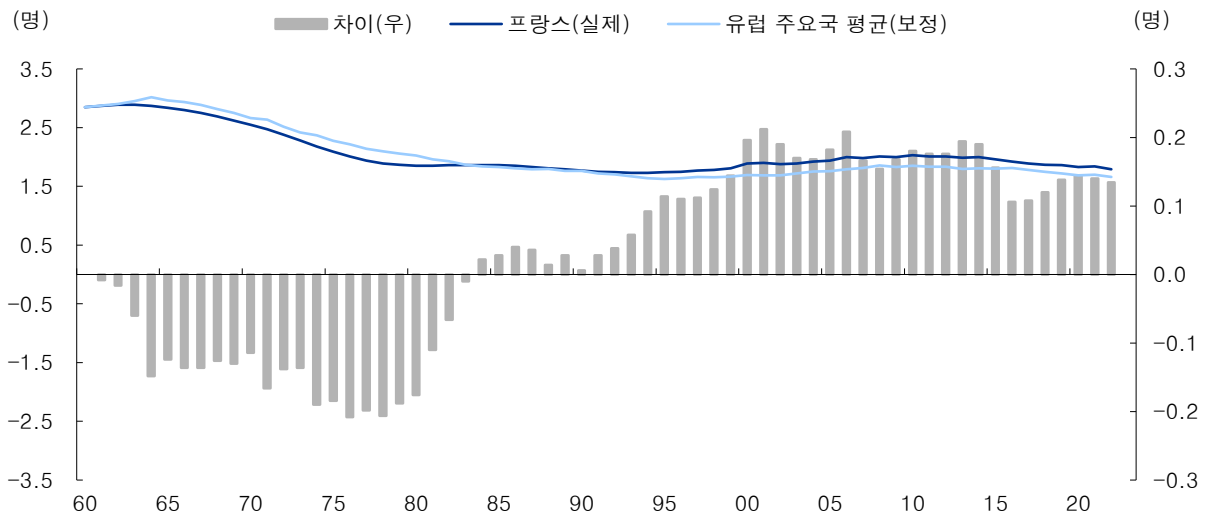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요 국가별 저출산 원인 분석

프랑스, 일본, 대만:
저출산 양상 제각각

프랑스, 일본, 대만의 저출산 사례를 분석(별첨 1~3)하여 원인, 정책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분석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비록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1.6~1.8명대로 선방하며 유럽 최고 수준인 반면, 대만은 1.0 미만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 일본은 1.3명대로 저조하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추가 하락을 지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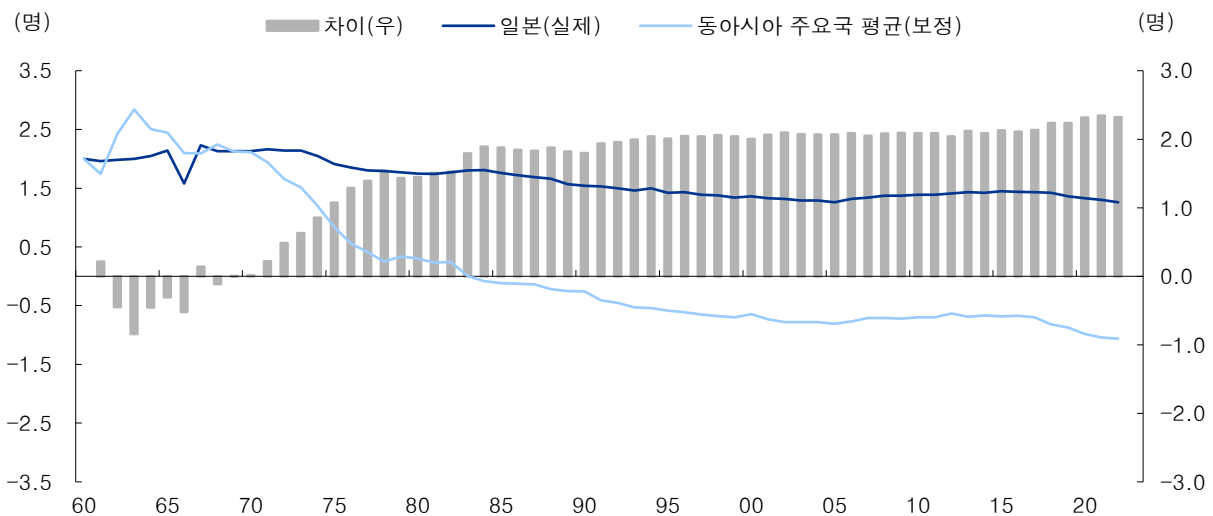
그림 8. 프랑스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유럽 주요국 평균(보정) 값은 유럽 주요국(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평균 합계출산율에 1960년 (프랑스 합계출산율 - 유럽 주요국 평균)을 Y절편에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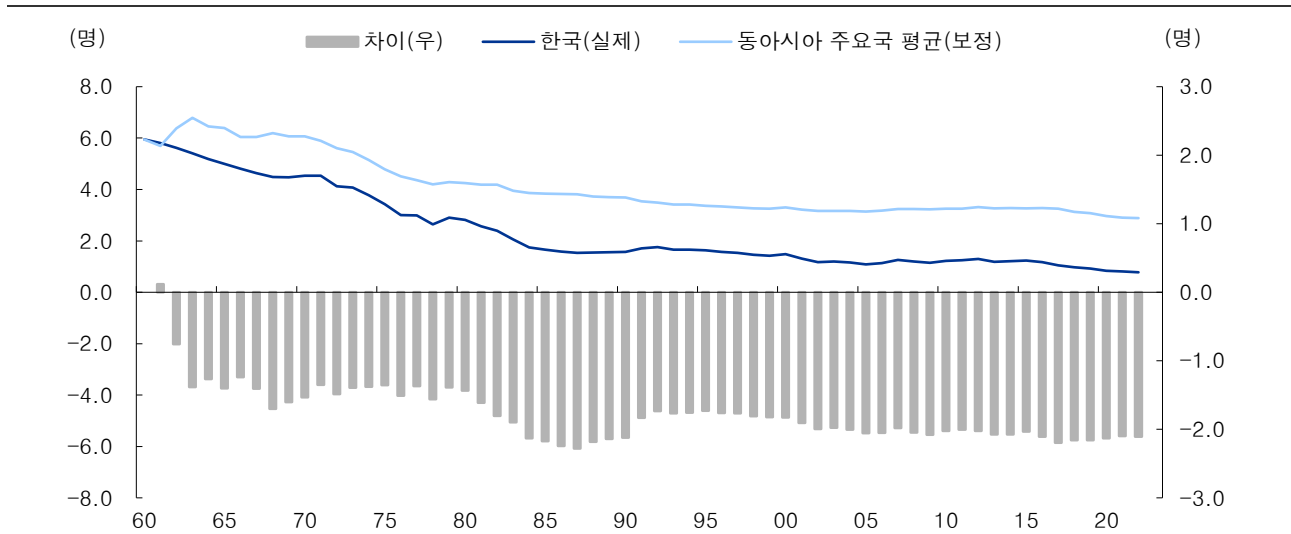
그림 9. 일본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동아시아 주요국 평균(보정) 값은 동아시아 주요국(일본, 한국, 중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에 1960년 (일본 합계출산율 - 동아시아 주요국 평균)을 Y절편에 가산

그림 10. 한국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UN, IBK 투자증권

주) 동아시아 주요국 평균(보정) 값은 동아시아 주요국(한국, 일본, 중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에 1960년 (한국 합계출산율 - 동아시아 주요국 평균)을 Y절편에 가산

공통점

프랑스, 일본, 대만 공통점

프랑스, 일본, 대만의 저출산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1) 경제적 불안정, 양육비 부담

첫째, 경제적 불안정과 높은 양육비가 핵심 요인이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낮은 소득 수준, 주거비 상승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대만은 주택 가격 급등, 일본은 장기불황, 프랑스는 최근 물가 상승과 사회적 불안정 등이 출산 감소와 연결된다.

2) 결혼 · 출산 인식 변화 만혼 추세

둘째, 결혼 ·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만혼 추세도 공통된 특징이다. 개인주의 확대,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커졌다. 특히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부담에 더해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초혼 연령은 전 국가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3) 육아와 일 양립 어려움 여성 육아 부담 가중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셋째, 육아와 경력의 양립이 어려운 것 역시 주요 문제다.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고,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아휴직이나 일 · 가정 양립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에는 직장 내 문화, 사회 인식 등의 장벽이 존재해 실효성이 낮다.

차이점

일본, 프랑스, 대만 저출산 차이점

공통된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일본, 프랑스, 대만, 중국은 각자의 사회적 배경과 정책 역사,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저출산의 양상과 원인에 차별성을 보인다.

일본:

- 1) 장시간 노동
- 2) 남성 중심 직장문화
- 3) 일·가정 양립 어려움

먼저 일본은 전통적인 기업문화와 성별 고정 역할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과 유사하다. 장시간 노동, 남성 중심 직장문화, 남성의 낮은 육아 참여율 등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와 경쟁 중심 교육 문화도 출산을 꺼리게 만든다. 한국 역시 학군지를 중심으로 높은 주거비와 학업 투자 비용이 높아지면서 한자녀 가정이 증가한다.

프랑스:

- 1) 고소득층 대상 수당 축소
- 2) 세제 혜택 조정

프랑스는 최근 출산을 하락은 정책 피로와 재정 압박에 따른 가족정책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층 대상 수당 축소, 세제 혜택 조정 등으로 정책의 보편성과 관대함이 일부 후퇴하면서 제도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혼외출산 비율이 높고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남녀 평등한 육아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다는 점은 프랑스의 특수한 맥락이다.

대만:

- 1) 주거난
- 2) 비혼, 만혼 등 확산

대만은 심각한 주거난과 급속한 비혼·만혼 확산이 있다. 타이베이 등 대도시의 높은 집값, 자산 불평등, 미래 불확실성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다. 동시에 ‘출산=희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어,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표 3. 출산을 감소 원인의 국가별 공통점

구분	공통 원인	설명
1	경제적 불안정 및 양육비 부담	- 청년층의 고용 불안, 낮은 임금, 비싼 주거비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룸. - 자녀 1인당 양육·교육비가 높아 다자녀 부담 증가. → 일본(장기불황), 대만(주택난), 중국(사교육비), 프랑스(보육비 증가) 공통 요소.
2	결혼·출산 기피 및 만혼화	- 개인주의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초혼 연령 상승,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도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 일본·대만·중국 혼외출산 비율 낮고 결혼 필수 인식 강함.
3	여성의 육아 부담 및 경력 단절 우려	-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기업 환경. - 남성의 낮은 육아 참여율. -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 단절에 대한 두려움.
4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또는 기대 미달	-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 단절에 대한 두려움. - 보육시설 부족, 제도와 현실 간 괴리. - 육아휴직 사용 장벽, 지원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5	양육·교육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과도한 시간, 자원, 감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는 정서적 부담.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 투자증권

표 4. 출산을 감소 원인의 국가별 차이점

구분	공통 원인	설명
일본	장시간 노동문화, 기업 내 고정된 성 역할 구조	- 남성 중심 직장문화와 초과근무 관행으로 육아 병행 어려움. - 워라밸 문화 정착 속도 느림.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축소)	- 2014년 이후 일부 가족수당 축소로 기존 정책 효과 약화. - 출산율 높은 편이나 최근 감소세 지속.
대만	비혼·만혼 확산, 극심한 주거난	- 혼인율 세계 최저 수준, 미혼율 급증. - 타이베이 등 도시 주택 가격이 결혼·출산의 장벽.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 투자증권

국가별 정책에 담긴 함의

공통점

정책적 공통점	각국은 저출산의 원인과 여건이 상이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사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한다. 정책의 강도와 효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산 수당, 양육 수당 등 금전적 지원 제공	-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일본, 대만, 중국은 출산 시 일시금 지급이나 양육수당 등 현금 지원책을 도입했다. 프랑스도 오래전부터 가족수당, 출생수당을 보편적으로 제공했다. 이들 국가는 적어도 <u>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금전 지원을 하는 데 합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u>
일·가정 양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세 나라 모두 법정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한다. <u>일·가정 양립 인프라(탄력근무제 등)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공통적이다.</u>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경감 확대	- 보육 및 교육 지원: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경감은 어느 나라나 핵심 정책이다. <u>일본은 보육 대기자 해소와 유아교육 무상화를 추진했고 프랑스는 질 높은 공공보육망을 유지하면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u>
난임, 불임 등 치료 보장 및 의료비 지원 제공	- 의료/난임 지원 및 건강 보장: 네 나라 모두 산모와 아동 건강지원을 강화했다. 산전검진, 출산의료비 지원은 기본이고, 난임 치료 지원(특히 대만의 전폭적 IVF 보조나 무상 치료(프랑스의 불임치료 보험 적용)도 이루어진다.

차이점

프랑스, 일본: 전담 부처 설치 대만: 최근에야 시작	- 정책 추진 체계: <u>프랑스는 전담 부처와 공공기관(CNAF 등)을 통해 오랫동안 가족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 일본도 법률 제정과 위원회 설치로 범정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u> 반면 대만은 최근에야 중앙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며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모든 형태 가정 지원 일본: 결혼 이성 부부 중심 대만: 가족 범위 확대 시도	- 지원 범위와 포용성: <u>프랑스는 결혼 여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가정을 포용하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결혼한 이성 부부 중심의 정책이 많다.</u>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고, 이들을 포함한 비혼 여성까지 난임지원을 논의하는 등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한다.
프랑스: 정책 규모 GDP 4% 일본: 증액 계획 대만: 3천 억 원 규모	- 정책 강도와 투자 규모: <u>프랑스는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이 3~4%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해왔고, 일본도 2030년까지 해당 예산을 배 이상 증액할 계획이다.</u> 대만은 2018년 이후 저출산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려 연간 약 72억 NTD(약 3천억 원)를 투입하고 있었다.
프랑스: 결혼보다 출산 지원 일본, 대만: 결혼 장려	- 문화적 접근: <u>일본과 대만은 결혼장려에 정책 일부를 할애하여 맞선 이벤트나 신혼부부 지원을 하지만, 프랑스는 결혼보다는 출산을 지원하고 비혼 출산 차별을 없애는 접근을 취한다.</u>

표 5. 국가별 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차이점 상세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정책 추진 체계	- 프랑스: 전담 부처와 공공기관(CNAF 등)을 통해 오랫동안 가족정책 추진 - 일본: 법률 제정과 위원회 설치로 범정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대만: 최근에는 중앙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며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시작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지원 범위와 포용성	- 프랑스: 결혼 여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가정을 포용 - 일본: 상대적으로 결혼한 이성 부부 중심의 정책이 많음 - 대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 비혼 여성의 난임지원 논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 강도와 투자 규모	- 프랑스: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이 3~4%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예산 투입 - 일본: 2030년까지 해당 예산을 배 이상 증액할 계획 - 대만: 2018년 이후 저출산 예산 연간 약 72억 NTD(약 3천억 원)를 투입
의료/난임 지원 및 건강 보장	문화적 접근	- 프랑스: 결혼보다는 출산을 지원하고 비혼 출산 차별을 없애는 접근을 취함 - 일본/대만: 결혼장려에 정책 일부를 할애하여 맞선 이벤트나 신혼부부 지원

자료: IBK 투자증권

Insight 1

지속 성장 가능 국가: 인도네시아

2050 년
세계 4 위 경제 대국,
인도네시아

골드만삭스의 장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50 년까지 세계 4 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며, 2075 년까지도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4 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배경에는 안정적인 인구 증가, 균형 잡힌 연령 구조, 낮은 부양 부담, 그리고 완만한 고령화 속도가 자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진입했으며, 인도는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높은 부양비 증가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인구 구조와 경제 성장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국가로서, 장기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신흥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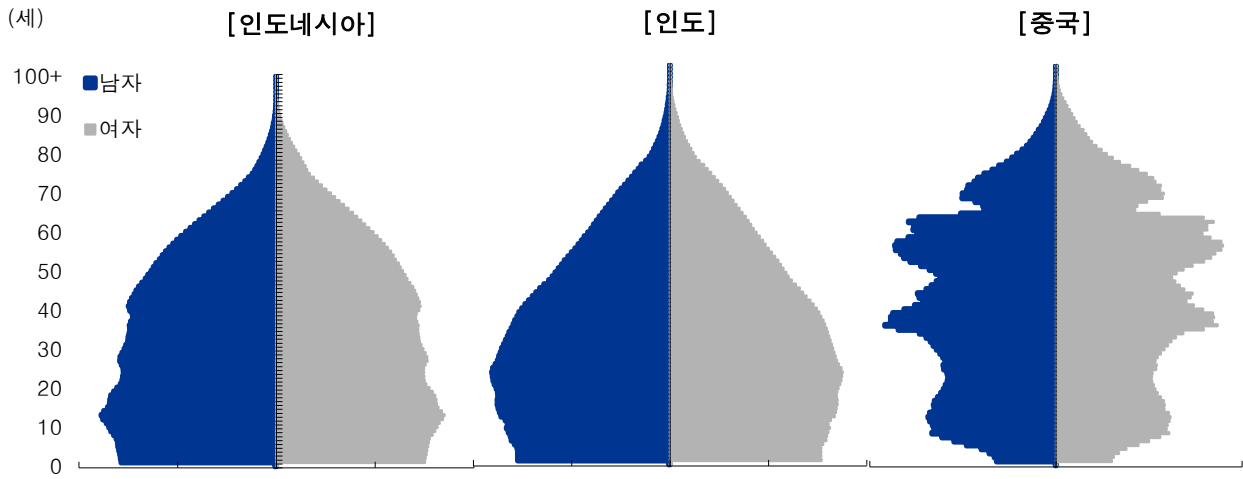
그림 11. 글로벌 경제 규모 순위 전망

World's largest economies (measured in USD)

Ranking	1980	2000	2022	2050	2075
1	United States	United States	United States	China	China
2	Japan	Japan	China	United States	India
3	Germany	Germany	Japan	India	United States
4	France	United Kingdom	Germany	Indonesia	Indonesia
5	United Kingdom	France	India	Germany	Nigeria
6	Italy	China	United Kingdom	Japan	Pakistan
7	China	Italy	France	United Kingdom	Egypt
8	Canada	Canada	Canada	Brazil	Brazil
9	Argentina	Mexico	Russia	France	Germany
10	Spain	Brazil	Italy	Russia	United Kingdom
11	Mexico	Spain	Brazil	Mexico	Mexico
12	Netherlands	Korea	Korea	Egypt	Japan
13	India	India	Australia	Saudi Arabia	Russia
14	Saudi Arabia	Netherlands	Mexico	Canada	Philippines
15	Australia	Australia	Spain	Nigeria	France

자료: 골드만삭스, IBK 투자증권

그림 12.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의 인구구조도 비교



자료: World Bank, IBK 투자증권

표 6.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의 인구구조 비교

(단위: %, 명)

기준연도: 2023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생산가능인구 비율	70.7%	67.5%	62.0%
인구 증가율	0.9%	0.8%	-0.1%
출산율	2.0	2.2	1.2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 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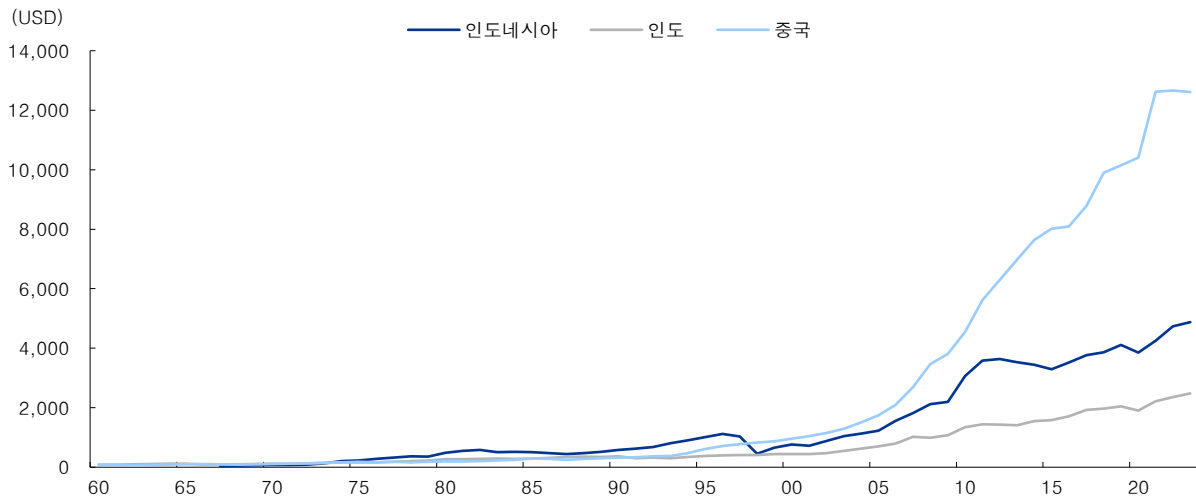
인구 구조 및 경제 성장: 인도네시아 vs 인도 vs 중국

1) 인구 규모 및 성장률

인도네시아, 2054년 정점 도달
인도, 2064년 17억 명 예상
중국, 2100년 6.3억 명으로 감소

인도네시아는 2024년 인구 약 2.85억 명으로 2054년 정점에 도달한 후에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는 2024년 약 14.5억 명으로 세계 최대 인구국이며, 2064년 약 17억 명으로 정점 도달 이후 감소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2023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100년까지 6.3억 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3.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의 1인당 GDP 비교



자료: World Bank, IBK 투자증권

표 7.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의 연령 구조 및 고령화 속도

국가	0-14 세	15-64 세	65 세 이상	중간연령
인도네시아	25%	68%	7%	30.4 세
인도	24%	68%	7%	29.5 세
중국	16%	69%	15%	40.1 세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 투자증권

2) 인구 부양비 및 사회적 부담

인도네시아, 부양비 부담 낮음
인도, 부양비 77.5% 예상
중국, 101.1%로 역전구조

인도네시아는 지속 가능한 부양비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노동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 관리에 유리한 요소다. 인도네시아는 2024 년 기준 총 부양비 46.8%으로 글로벌 평균(58.4%)보다 낮아 사회복지 부담이 완만히 증가할 것이다. 인도는 2100 년까지 부양비 77.5%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인구 구조 전환에 대비 필요하다. 중국은 2079 년 부양비 101.1%로 생산가능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역전 구조가 발생할 것이다.

표 8. 인도네시아의 20 년 전후 비교

분야	세부 주제	2000 년대	2020 년대
정치	정치 리더십	군 · 엘리트 중심 정치	비엘리트 출신 조코위 대통령 집권
		(유도요노 대통령, 군 출신)	(목재 사업가 → 대통령)
	정치 구조	민주주의 제도화 초입	실용주의 정치 + '최대 연정'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안정기	프라보워(야당 경쟁자)를 국방장관 기용
경제	경제 성장률	외환위기 여파 회복 중	팬데믹 이후에도 5%대 성장 유지
		연 4~5% 성장	디지털 기반 성장 가속
	산업 구조 변화	자원 수출 중심 구조	디지털 서비스 중심 구조 전환
		(석탄 · 팜유 등 1 차 산업)	Gojek-Tokopedia 합병(GoTo)
	소득 격차	상대적으로 완만한 불평등	불평등 심화, 지니계수 0.41
		(지니계수 약 0.34)	상위 1%가 자산 절반 보유(2021 년 기준)
종교	종교 정체성	뻘짜실라(다종교 공존 이념) 기반	도시 지역 중심 보수 이슬람 확산
		온건 이슬람 중심	종교적 정체성 강화
	종교와 정치	종교는 정치 외부의 가치로 인식	아후 사건(2017):
			기독교 주지사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 → 종교 동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
문화	대중문화	TV · 라디오 중심, 외래문화 제한적 수용	K-POP · 넷플릭스 등 외래문화 대중화
		할리우드 · 일본 콘텐츠 주류	OTT 시장 2.5 억 달러 규모(2023)
	디지털 문화	인터넷 보급률 약 10%	SNS · 유튜브 중심 팬덤 · MZ 문화 활성화
		모바일 기반 콘텐츠 희박, SMS 중심 사용	청년층 중심 디지털 소비 확대
인구구조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약 63%	생산가능인구 71% (2023)
		도시화율 45%	도시화율 57% 이상, 인구 보너스 시기
	출산 · 고령화	출산율 2.6 명, 고령인구 5% 미만	출산율 2.2 명 (2022), 고령화 속도는 완만
			→ 고령사회 대비는 시작 단계
	수도 집중	자카르타 인구 집중 과밀화	누산타라 수도 이전 추진 중
		침하 · 교통난 등 문제 발생	보르네오섬 동부, 2024 년 착공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 투자증권

표 9. 자카르타 종합지수 내 시가총액 TOP 20 개 기업

티커	이름	가격(달러)	시가총액 (백만 달러)	시가총액 (억 원)	GICS 산업명	기업개요
BBRI U Equity	뱅크 라크아트 인도네시아	4,050.0	251.2	3,697.9	은행	뱅크 라크아트 인도네시아(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PT)는 상업은행 활동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당사는 사리아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 활동도 제공한다.
BBCA U Equity	뱅크 센트럴 아시아	8,500.0	223.3	3,286.5	은행	뱅크 센트럴 아시아(Bank Central Asia Tbk)는 은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당사는 관리 및 신탁 업무 외에 금융 기관의 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자회사를 통해 리스 및 소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MRI U Equity	뱅크 만다리	5,200.0	187.6	2,761.1	은행	뱅크 만다리(Bank Mandiri)는 4개의 국영은행부미 다야은행, 다강 네가라 은행, 엑스포르 임포르트 인도네시아 은행, 엑시 은행, 팜방구안 은행, 바핀도 은행이 합병하여 설립된 은행. 당사는 일반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AN U Equity	바얀 리소시스	20,025.0	142.4	2,096.7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바얀 리소시스(Bayan Resources Tbk PT)는 석탄생산업체. 당사는 노천광에서 연료를 채굴한다.
TLKM U Equity	텔콤 인도네시아 페르세로	2,410.0	112.6	1,656.9	다양한 전기통신 서비스	텔콤 인도네시아 페르세로(Telkom Indonesia (Persero) Tbk)는 전화, 텔레콤, 전보, 위성 및 임대 회선 서비스 등 다양한 국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 당사는 이메일, 모바일 통신, 휴대폰 서비스도 제공한다.
ASII U Equity	아스트라 인터내셔널	4,920.0	89.6	1,319.3	복합 기업	아스트라 인터내셔널(PT Astra International Tbk)은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을 조립 및 유통하는 업체. 당사는 또한 자회사를 통해 광업, 대규모 농장 개발, 금융 및 정보 기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DCII U Equity	DCI Indonesia Tbk PT	167,950.0	89.5	1,317.7	IT 서비스	인도네시아 최초로 Tier IV 인증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자카르타 외곽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하며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 급성장했다.
BREN U Equity	Barito Renewables Energy Tbk PT	5,500.0	85.6	1,259.6	독립 전력 생산업체와	자열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해왔다. 모회사인 Barito Padic 그룹 산하에서 자회사 Sar Energy Geothermal을 통해 세계 최대 민간 자열 발전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GOTO U Equity	GoTo Gojek Tokopedia Tbk PT	83.0	73.5	1,082.4	대규모 소매업	고투 고젝 토크페디아(PT GoTo Gojek Tokopedia Tbk)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업체. 당사는 모빌리티, 음식 배달, 물류, 전자상거래 및 금융 기술 솔루션을 제공. 당사는 인도네시아 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AMMN U Equity	Amman Mineral Internasional PT	5,375.0	69.5	1,023.0	금속 & 채광	인도네시아 서부 술바와 섬에서 세계 최대 구리 · 금 광산 중 하나인 Batu Hiju 광산을 운영해왔다. 2016년 Newmont Mining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했고, 자원 가격 상승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DSSA U Equity	디안 스와스타티카 센토사	42,600.0	67.0	986.7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디안 스와스타티카 센토사(PT Dan Swastika Sentosa Tbk)는 전력 및 증기 생산업체로 석탄 화력발전소 및 가스 화력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TPIA U Equity	찬드라 아스리 퍼시픽	7,200.0	66.4	977.4	화학	찬드라 아스리 퍼시픽(PT Chandra Asri Pacific Tbk)은 화학 및 인프라 솔루션 업체. 당사는 합성고무의 원료로 사용되는 올레핀, 폴리올레핀, 스타렌 모노머 및 부타디엔 제품을 제조한다. 당사는 인도네시아 국내 대운수트림산업에 제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역 시장에 수출도 한다.
BBNI U Equity	네가라 인도네시아 페르세로 은행	4,240.0	62.6	922.0	은행	네가라 인도네시아 페르세로 은행(PT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는 기업 및 개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은행.
SMMA U Equity	시나르 마스 멀티아르타	15,500.0	51.5	757.3	보험	시나르 마스 멀티아르타(PT Sinar Mas Multiarta Tbk)는 시나르 마스(Sinar Mas) 그룹의 통합 금융 서비스 자회사. 당사는 자회사를 통해 금융, 리스, 팩토링, 소비자 금융, 자동차, 트럭 및 중장비 금융, 보험 및 자본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보안 시스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MRT U Equity	숨베르 알파리아 트라자야	2,050.0	36.1	531.9	필수소비재 판매업체	숨베르 알파리아 트라자야(PT Sumber Alam Triya Tbk)는 슈퍼마켓점 운영
UNTR U Equity	유나이티드 트랙터스	23,550.0	30.9	454.5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유나이티드 트랙터스(PT United Tractors Tbk)는 건설 기계를 유통 및 임대하는 업체. 당사는 또한 채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비를 거래 및 조립하고 있다.
INDF U Equity	인도푸드 숙세스 마크무르	7,100.0	29.9	439.8	식품	인도푸드 숙세스 마크무르(PT Indobud Sukses Makmur Tbk) 및 자회사는 유아용 국수, 밀가루, 유아식, 조미료, 커피, 식용유 및 스낵 등을 제조.
CPIN U Equity	차론 폭판드 인도네시아	4,390.0	24.6	361.8	식품	차론 폭판드 인도네시아(PT Charoen Pokphand Indonesia Tbk)는 가축 사료, 플라스틱 가방, 양계 장비 및 양계육을 제조, 유통 및 가공하는 업체. 당사는 자회사를 통해 양계 농장을 운영하며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BRMS U Equity	부미 리소시스 미네랄스	332.0	23.2	341.0	금속 & 채광	부미 리소시스 미네랄스(PT Bumi Resources Minerals Tbk)는 채광업체. 당사는 구리, 금, 아연 및 납 매장분의 탐사 및 생산에 주력한다. 당사는 인도네시아 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CBP U Equity	인도푸드 CBP 숙세스 마크무르	10,175.0	23.1	340.1	식품	인도푸드 CBP 숙세스 마크무르(PT Indobud CBP Sukses Makmur Tbk)는 각종 식품 공급업체. 당사는 원료 생산에서 가공 및 사판 상품 제조까지 식품 제조 전반을 다루는 종합식품 회사이다.

자료: Bloomberg, IBK 투자증권

주) 2025년 3월 31일 종가 기준

표 10. 미국에 상장된 인도네시아 기업

티커	이름	가격(USD)	시가총액 (백만 달러)	시가총액 (억 원)	GiCS 산업명	기업개요
INDO US Equity	INDONESIA ENERGY CORP LTD	2.8	28.1	413.6	석유, 가스 & 소모 연료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해왔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American)에 상장했으며, 상장 당시 소규모 원유 생산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IGEX US Equity	INDO GLOBAL EXCHANGES PTE. L	0.1	3.1	45.3	캐피탈 시장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로, 인도네시아 관련 금융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주식 및 외환 정보 제공 플랫폼을 표방했으나, 사업성과가 부족했고 실질적인 운영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미국 OTC 마켓에 등록된 페니 스탁 수준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료: Bloomberg, IBK 투자증권
주) 2025년 3월 31일 종가 기준

표 11. 한국 및 미국에 상장된 인도네시아 ETF

이름	국가	펀드자산(백만 달러)	펀드자산(억 원)
아이셰어즈 MSCI 인도네시아 ETF	미국	2705	3,981.7
뱅크인도네시아인덱스 ETF	미국	267	393.0
한국투자 KINDEX 인도네시아 MSCI ETF	한국	175	257.6
미래에셋 인도네시아 Top5 ETN	한국	67	98.6

자료: Bloomberg, IBK 투자증권
주) 2025년 3월 31일 종가 기준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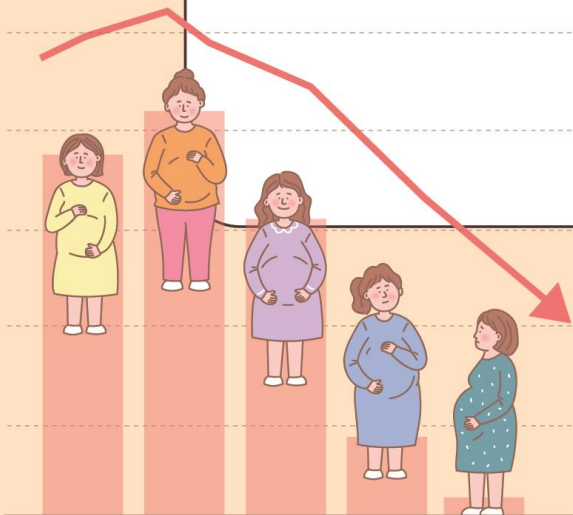
유통·식자재/지주

남성현 연구위원

국내 인구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저출산 탈피 정책 확대 필요성:
민간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제안



3. 국내 인구구조 이대로 괜찮은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궁극적으로 저출산이 근본 원인

향후 인구구조는
고령화, 초고령화,
1인가구, 1인고령화로 구분

2024년 인구구조에 있어 가장 큰 화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65세 인구 비중은 20%를 상회하였고, 현 시점에서 보면 동 추세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은 고령화, 1인가구, 1인고령화, 초고령화로 구분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0년 이후 가족 구성원 수가 세분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절대적인 고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1인고령화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
1960년: 2.9%
2025년: 20.6%
2070년: 46.4%

196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25년 20.6%, 2070년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현재 인구구조 추세가 유지된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파악된다.

2025년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시작
2070년
약 3,720만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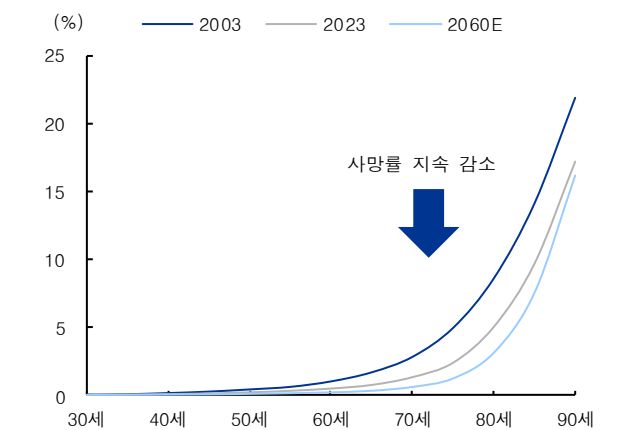
2025년은 초고령화 사회보다 더욱 우려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바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실 초고령화 사회는 저출산에 따른 문제에서 파생되는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족구성이 1인가구 형태로 전환되면서 초혼연령이 늦춰지게 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저연령층보다는 고령계층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2025년 인구수는 5,168만명으로 2024년 대비 -0.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70년까지 인구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추세가 유지될 경우 통계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구수는 2070년 3,720만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구수 감소는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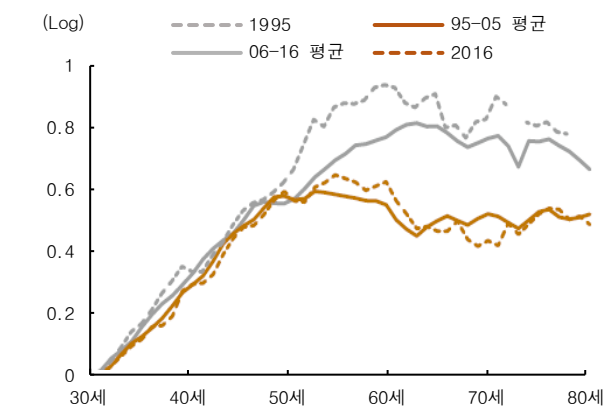
1) 초고령 사회 진입: 한국은행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증가할수록 현재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95~2005년과 2006~2016년 기간을 나누어보면 연령대별 소비 차이가 발생하는데, 1995~2005년 소비의 정점은 60대 초반이었지만, 2006~2016년은 50대 초중반에서 소비의 정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속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약 0.7%의 소비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소비에 대한 추가적인 동기유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고령화에 따른 향후 기대수명 증가가 현 시점 소비여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14. 연도별 사망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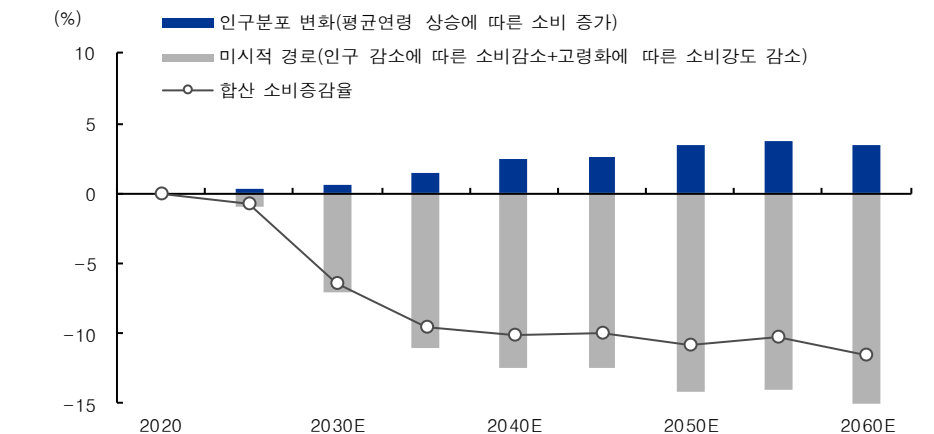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15. 기대수명 변화에 따른 생애주기 소비강도 변화



자료: 한국은행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 재인용, IBK 투자증권

그림 16.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소비 영향 전망



자료: 한국은행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 재인용, IBK 투자증권
주) 통계청 중위 인구전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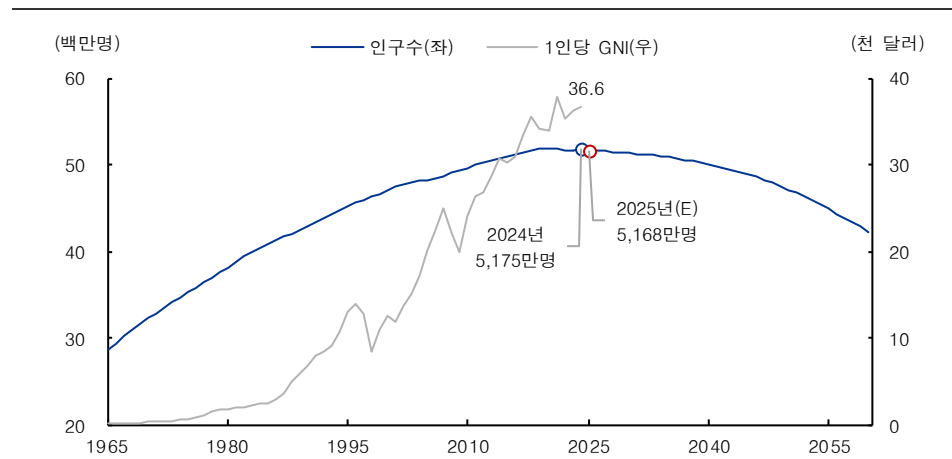
내수시장=
인구수(Q)×소득수준(P)

2) 인구수 감소: 인구수 감소는 내수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내수 시장은 인구수(Q)와 소득수준 상승(P)이라는 팩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인구수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었지만, 현 시점부터는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만큼 인구수 즉, Q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인구수 감소 문제를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인구구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

사실 두가지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리해서 언급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수 감소가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신생아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이어져오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화 및 인구수 감소는 결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 보고 있다. 선제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림 17. 1인당 GNI 및 인구수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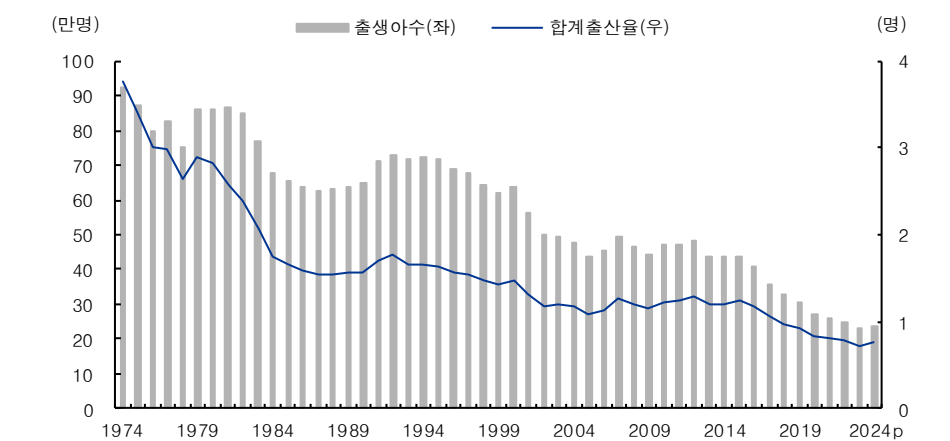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출산율 감소와 생산연령 인구

출생아수
1981년: 86.7만명
2024년 23.8만명(-73%)

국내 출산율은 아시아권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통계 자료가 집계된 1970년 4.53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1.0명 이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내수 및 국가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실질 출생아수도 하락하고 있다. 1981년 전국 출생아수는 약 87만명(867,409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23.8만명으로 약 72.5% 감소하였다.

그림 18. 국내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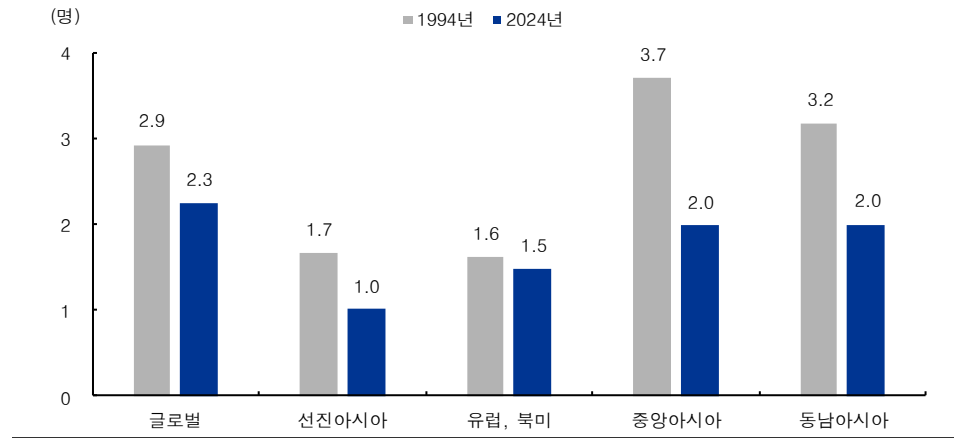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전세계적 출산율 감소,
그 중에서 한국은 최하위

물론, 출산율 감소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 합계출산율은 북미는 1.6명, 서유럽 1.4명, 중앙·동유럽 1.4명, 중화권 1.0명, 선진 아시아 1.1명 등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합계출산율 0.75명과 비교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9. 글로벌 주요 지역 출산율 비교



자료: UN, IBK 투자증권

표 12. 국가별 출산율 추이 및 전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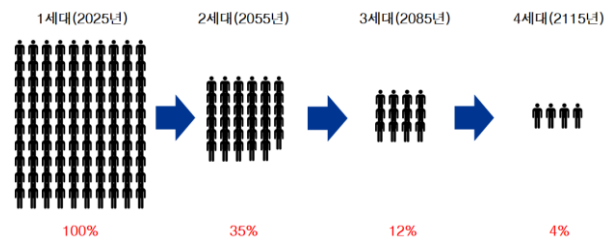
2024년 출산율 하위 20 개국		1994년	2024년	2054년	2024년 출산율 상위 20 개국		1994년	2024년	2054년
1	마카오	1.43	0.68	0.94	1	차드	7.31	6.03	3.62
2	홍콩	1.37	0.73	0.99	2	소말리아	7.54	6.01	3.37
3	대한민국	1.67	0.73	1.06	3	콩고민주공화국	6.64	5.98	3.43
4	대만	1.77	0.86	1.10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92	5.95	3.14
5	푸에르토리코	2.18	0.94	1.15	5	니제르	7.79	5.94	3.03
6	싱가폴	1.47	0.95	1.17	6	말리	7.12	5.51	3.15
7	우크라이나	1.47	0.99	1.16	7	앙골라	6.99	5.05	3.07
8	중국	1.63	1.01	1.20	8	브루나이	7.23	4.79	2.82
9	큐라소	2.43	1.07	1.24	9	아프가니스탄	7.77	4.76	2.94
10	말타	1.84	1.11	1.27	10	모잠비크	6.08	4.69	2.77
11	칠레	2.38	1.14	1.26	11	마우리타니아	6.06	4.63	2.98
12	태국	1.93	1.20	1.31	12	마요트	5.67	4.56	3.14
13	아랍에미리트	3.76	1.21	1.34	13	탄자니아	5.89	4.54	3.10
14	이탈리아	1.21	1.21	1.36	14	예멘	7.80	4.50	2.67
15	리투아니아	1.58	1.21	1.37	15	베냉	6.42	4.48	2.93
16	일본	1.47	1.22	1.36	16	나이지리아	6.32	4.38	2.54
17	스페인	1.19	1.22	1.38	17	카메룬	6.04	4.26	2.84
18	벨라루스	1.49	1.22	1.40	18	수단	5.91	4.26	2.89
19	마우리타스	2.24	1.23	1.33	19	코트디부아르	6.13	4.23	2.95
20	핀란드	1.84	1.29	1.43	20	우간다	6.90	4.16	2.50
세계 평균		2.93	2.25	2.07	세계 평균		2.93	2.25	2.07

자료: UN, IBK 투자증권

인구수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 2.1 명
국내 합계출산율: 0.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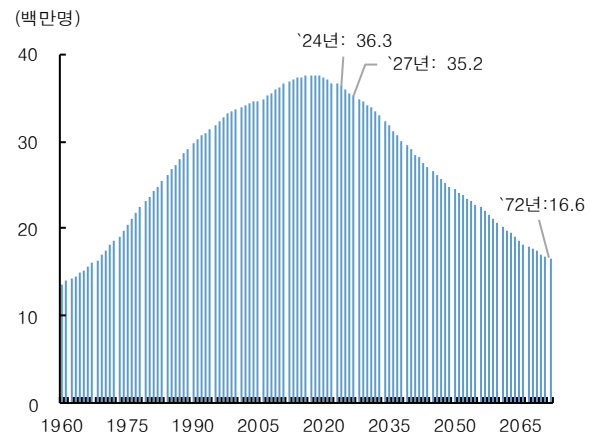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대체출산율(부모 세대를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녀 수)은 2.1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합계출산율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국내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합계출산율 감소가 생산연령인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생산연령인구는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면 생산연령인구 유입 속도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 고령화 계층의 증가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20. 합계출산율 0.7명 지속 시 세대별 출생자수 예시



자료: IBK 투자증권

그림 21. 생산가능 인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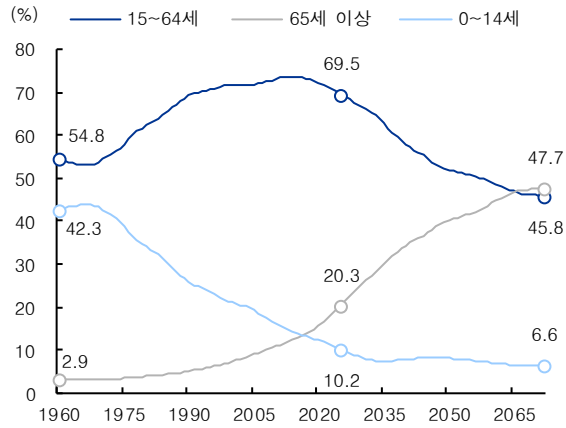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출산율 감소로
생산연령인구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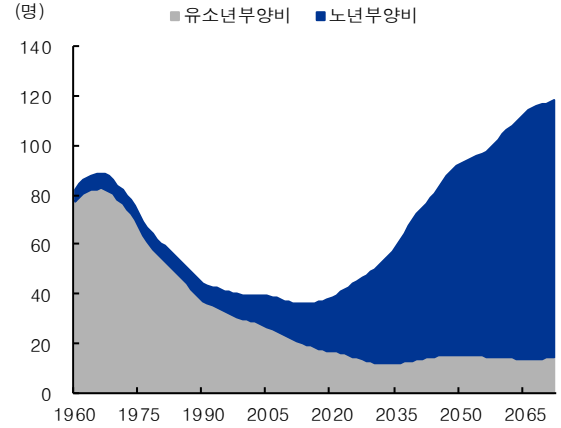
1960년 생산연령인구는 54.8%, 유소년인구는 42.3%에 달하였다. 2025년의 경우 생산연령인구는 69.5%, 유소년인구는 10.2%로 변했고, 동 수치가 유지될 경우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45.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절대적인 수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3,633만 명이었는데, 2027년에는 3,51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림 22. 연령대별 인구비율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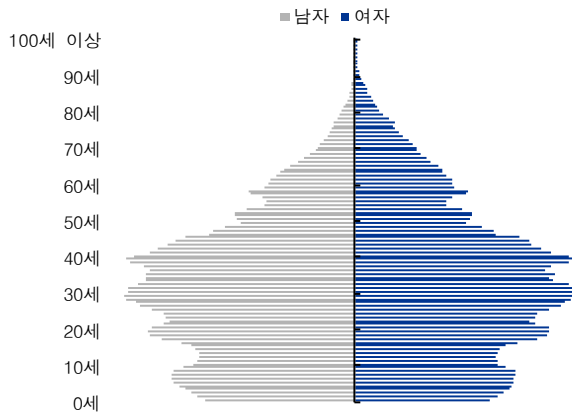
그림 23.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추이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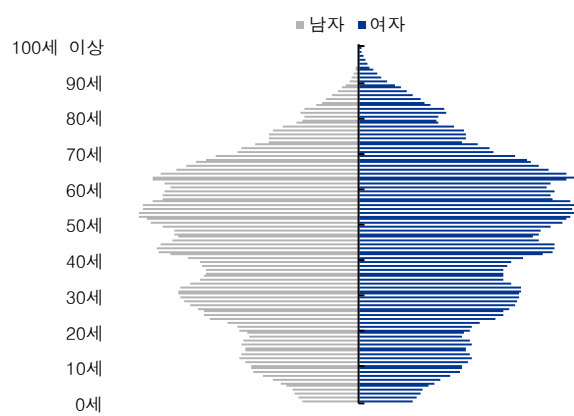
주) (유소년 부양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 (노년부양비=노년인구/생산가능인구)

그림 24. 국내 인구 피라미드(2000년)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25. 국내 인구 피라미드(2024년)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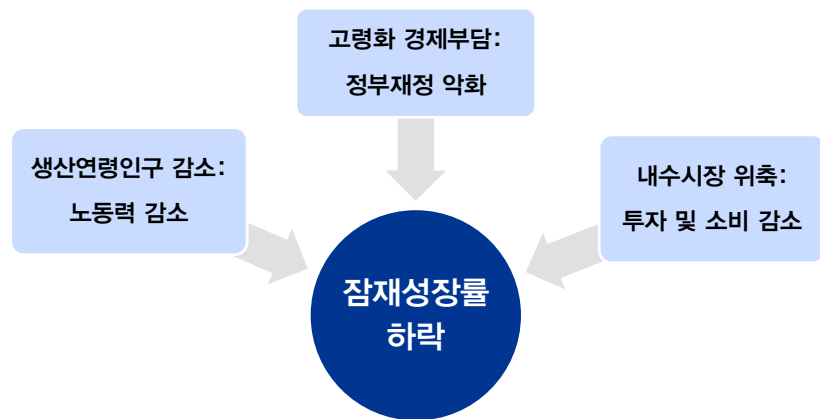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문제점

- 1) 노동력 감소
- 2) 정부재정 악화
- 3) 투자감소, 소비 위축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세대층이 얇아지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기반 산업을 받쳐줘야 할 노동자 계층이 감소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 경쟁력의 훼손이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된다.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로 자본집약적 산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력 비중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소득 계층이 얇아질수록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1) 생산연령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2) 고령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 3)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등이다.

결론적으로, 인구수 감소는 단순 사회적 문제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림 2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요 문제



자료: IBK 투자증권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출산율 감소 원인

- 1) 청년층 소득 감소
- 2) 사회적 경제여건 악화
- 3) 초혼 연령 상승
- 4) 생애주기와 근속연수의 미스매치
- 5) 여성 사회적 지위 확대

저출산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뽑고 있다. 1) 청년층 소득 수준 감소, 2) 사회적 경제여건 악화(일자리 부족, 자본집약적 산업 구조), 3) 초혼 연령의 상승, 4) 삶의 생애주기와 근속연수의 미스매치, 5)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이다.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 가족형성에 대한 유대감 약화, ▶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인한 사회활동 참가 비율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재정립해보면 경제적인 부분과 인식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인식적인 부분이 아닌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제적 자립도를 구축하기 힘든 세대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출산율은 경제활동 그리고 노동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며, 넓은 범주에서 보면 자산시장(부동산) 상승에 따른 부분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표 13.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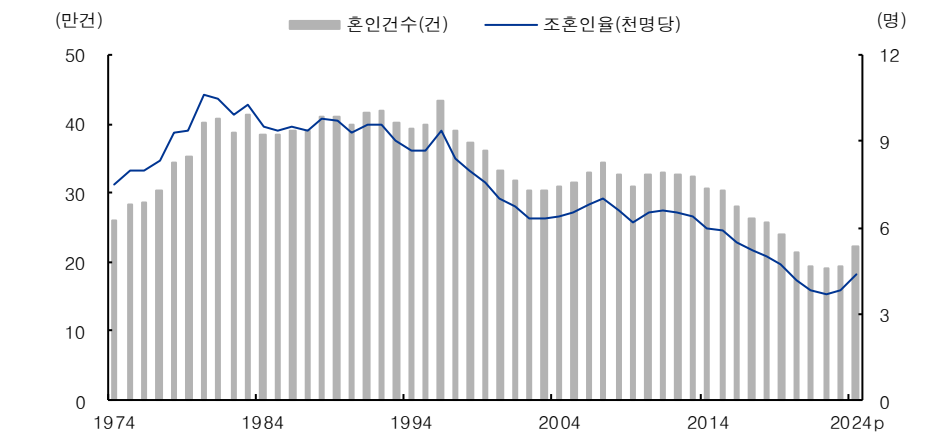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제적 부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고용 시장 불확실성	청년층 소득 수준 감소
		경제여건 악화(일자리 부족, 자본집약적 산업 구조)
		삶의 생애주기와 근속연수의 미스매치
인식적 부분	가족형성에 대한 유대감 약화	초혼 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인한 사회활동 참가 비율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

자료: IBK 투자증권

출산율 증가의 전제
혼인인구 ↑ × 초혼연령 ↓

출산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혼인 인구가 증가해야 하고, 초혼 연령이 낮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혼인 인구가 출산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혼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혼인건수는 1970년대 30만 건에서 1980년대 40만 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0년 전까지 40만 건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 30만 건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19만 건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림 27.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천명당 혼인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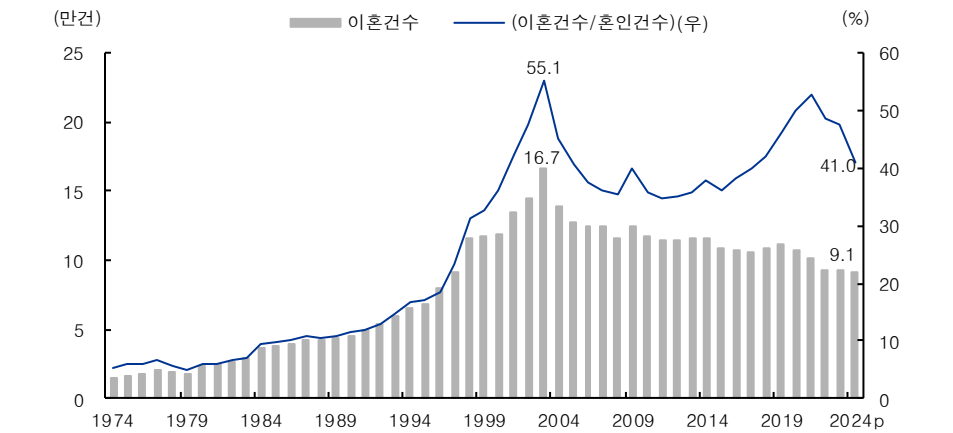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혼인건수는 감소 중
이혼건수는 증가 중

혼인건수와 반대로 이혼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1970년 이혼건수는 1만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 동 수치는 17만 건까지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는 9만건으로 하락하였지만, 1997년 9만 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적으로 이혼건수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건수대비 이혼건수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70년 혼인건수대비 이혼건수 비율은 3.3%에 불과했지만, 2023년의 경우 47.4%까지 증가하였다. 이혼건수가 가장 높았던 2003년의 경우 약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수치보다 혼인건수 감소에 따라 이혼건수가 낮아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림 28. 이혼건수 및 이혼율(이혼건수/혼인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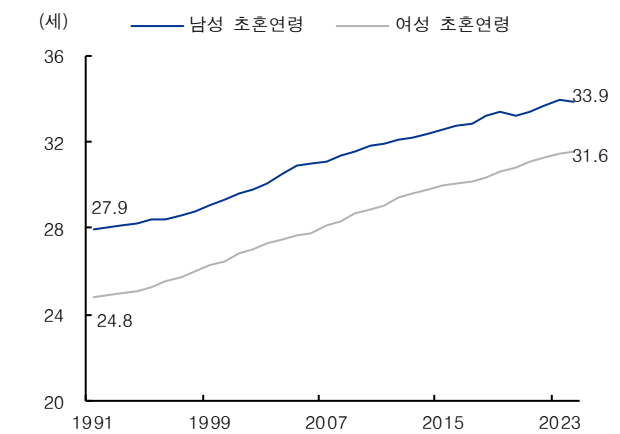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초혼연령 상승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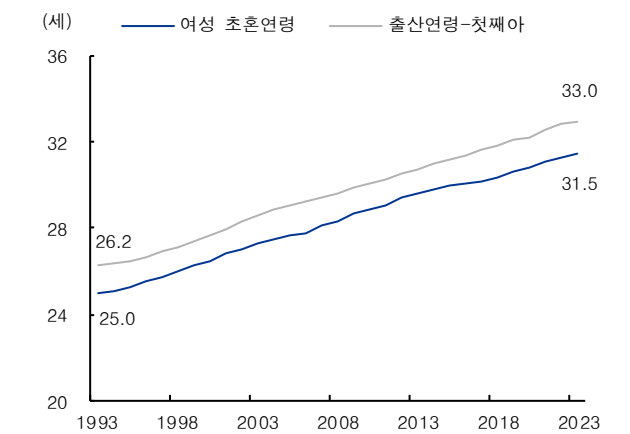
초혼연령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2023년 평균초혼연령을 보면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4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2세, 여자는 0.1세 상승하였다. 이는 2002년 남자 29.8세, 여자 27.0세에 비해서 4세 가량 늦추어진 것으로, 혼인 시점이 늦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혼인 시점이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림 29. 국내 성별 초혼연령 추이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30. 여성 초혼연령 상승은 출산 연령 증가로 이어짐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고학력 여성 비중 증가
↓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
↓
일과 자아실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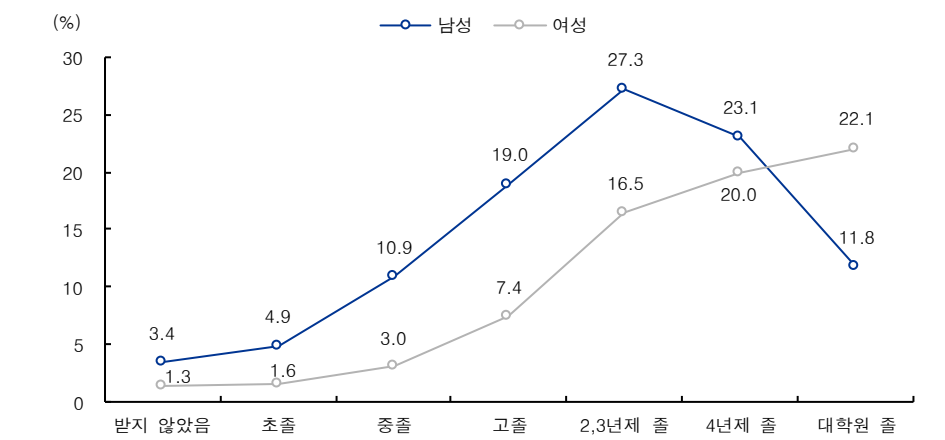
인식적인 부분으로 보면 여성의 사회적 위치 상승에 따른 삶의 방식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학업 성취도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고학력 비중 증가 →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 → 소득 증가 등에 따라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을 위한 태도 변화가 이루어낸 결과로 해석한다.

실제로 동 부분은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2023년 기준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대비 5.7%p 상승하였고, 동기간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15년 대비 약 11.7%p(2015년 59.6%)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998년 67.9%에서 2018년 43.5%로 20%p 이상 감소하였다.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고용률 상승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성 고용 상승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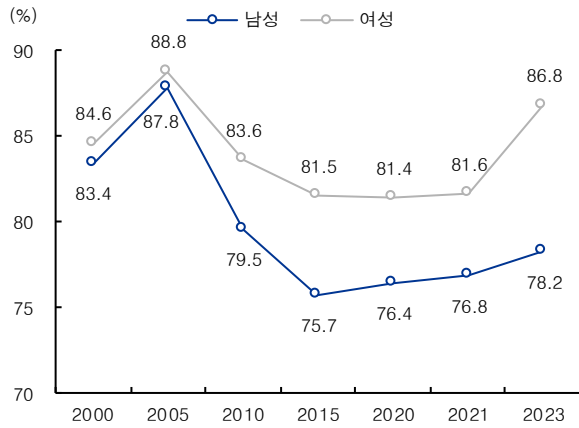
임금수준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비율은 1998년 63.1% 수준에서 2018년 68.8%까지 상승하였다. 고용과 소득수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라 삶의 방식을 대하는 태도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타 지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31. 교육정도별 미혼 비율(30세 이상,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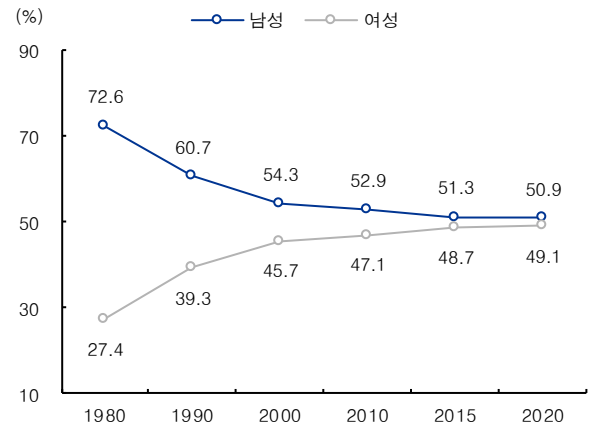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32. 성별 대학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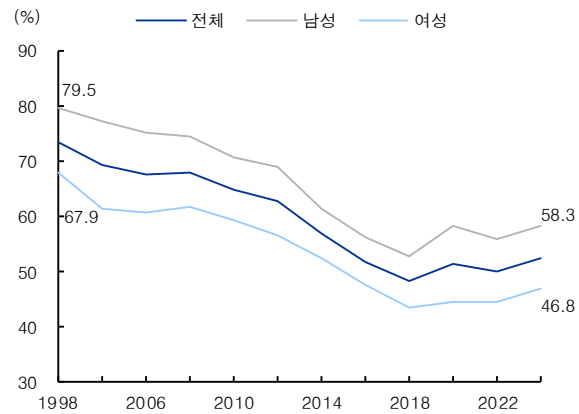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IBK 투자증권

그림 33. 연도별 대학진학자(신입생)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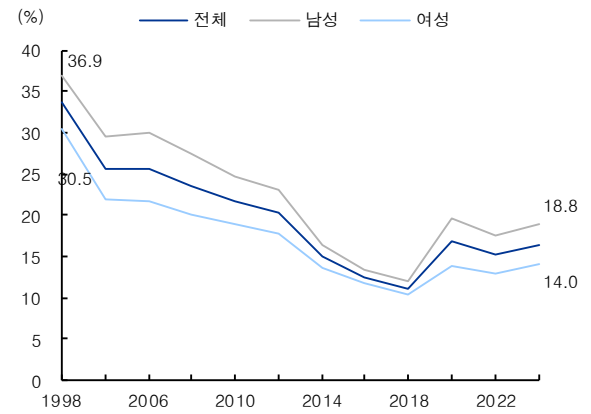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IBK 투자증권

그림 34. 결혼에 대한 인식(반드시 해야한다+하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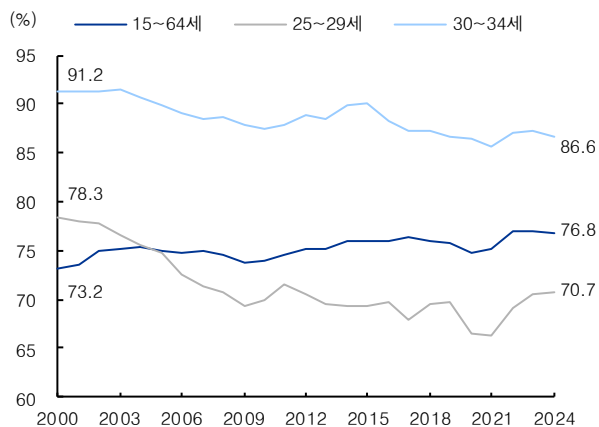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35. 결혼에 대한 인식(반드시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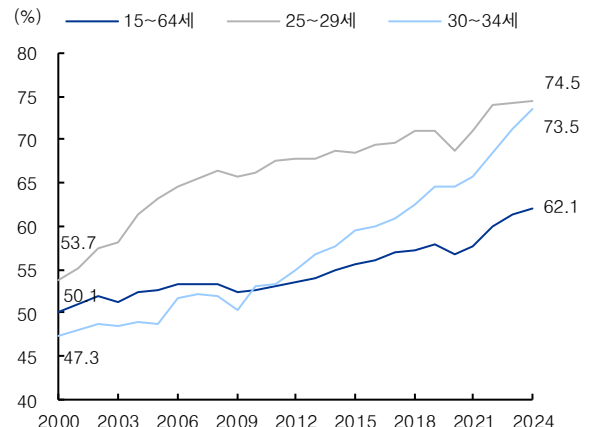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36. 남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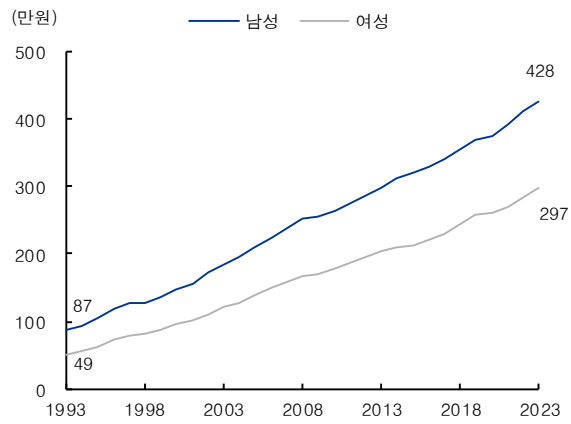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37.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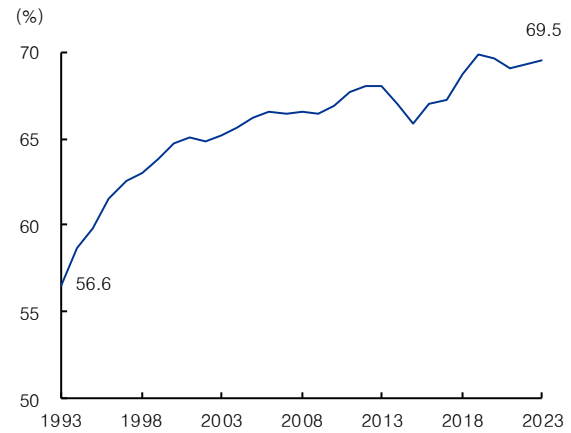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38. 성별 월평균 임금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39.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렇다면 출산율 감소를 막을 수는 없을까?

출산율 감소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앞서 언급한 데이터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출산율 감소를 수용해야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초혼연령을 낮추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순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대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해결도 가능

경제 성장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이것은 경제적 이유가 출산율을 막고 있다고 하면,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출산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출산관련 정책은 크게 보면 금전적인 정책과 사회적 기반 마련이라는 틀로 나누어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3차에 걸쳐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1차는(’06~’10년) 저출산 극복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2차는(’11~’15년)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 강화, ▶ 3차는(’16~’20년)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을 포함하였다.

표 14.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기본계획 주요내용(고령화 제외)

구분	시기	목표	핵심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제 1 차	2006~2010 년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주거 지원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제 2 차	2011~2015 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3%→5%) - 여성 경력단절 예방 -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확대
제 3 차	2016~2020 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 완화 (소득 기준 50%→70%) - 예비 부부 전세자금 대출 결혼 3개월 전으로 조정, 대출금액 확대 -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1개월→3개월)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제 4 차	2021 ~2025 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영아수당 신설 (22년 도입, 25년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 - 출생 바우처 200만 원 지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 (60만 원→100만 원) - '3+3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각각 3개월 육아휴직 시 소득 대체율 상향) -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 2자녀로 확대 - 유연근무제 확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IBK 투자증권

정부의 저출산 원인 분석

- 1) 고용시장 불안정성
- 2) 교육 경쟁 심화
- 3) 거주비용 증가
- 4) 일·가정 양립 어려움
- 5) 돌봄의 부재

정부가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은 크게 5가지로, 1) 고용시장의 불안정성, 2) 교육 경쟁 심화, 3) 거주비용의 증가, 4)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 돌봄의 부재이다. 이에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앞서 당사에서 언급한 구조적 원인과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 지원을 보면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다. 지자체마다 관련 지원이 상이하지만, 2008년 고운맘카드(현재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를 도입하면서 2010년 30만원에서 2019년 60만원으로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였고, 아동수당, 영유아 돌봄 등 관련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돌봄 구조를 확대하면서 초등학교 늘봄 제도까지 도입하였다. 출산부터 아이를 키우는 과정까지 경제적 지원 및 정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여건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도입 및 확대를 지속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육아 돌봄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 90일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증액(정액 50만원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연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일 → 10일)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 5대 과제

- 1) 돌봄과 교육
- 2) 육아휴직 강화
- 3) 주거서비스 강화
- 4) 양육부담 경감
- 5)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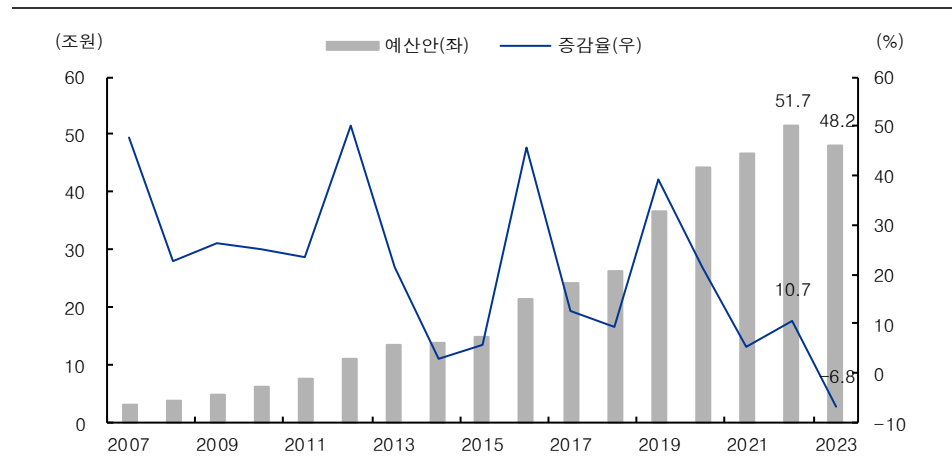
2024년 정부는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총 15.4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돌봄과 교육에 1조 3,245억 원(전년 대비 +23.7%), 육아휴직 강화 및 활용여건 개선 2조 1,531억 원(전년 대비 +18.8%), 주거서비스(출산가구 주거안정 강화) 8조 9,732억 원(전년 대비 +30.3%),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 8,887억 원(전년 대비 +78.1%), 의료비 지원 504억 원(전년 대비 +1,700%) 등이다. 소폭이지만, 정책적 노력 확대에 따라 2025년 들어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출산율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표 15. 2024년 저출산 대응 5대 핵심과제

구분	예산 규모(전년 대비 증감)	세부 내용
춤추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1조 3,245억 원(+23.7%)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충 - 영아반 보육료 추가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2조 1,531억 원(+18.8%)	- 육아휴직 유급 기간 연장 -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조성 - 육아기 근로단축 대폭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8조 9,732억 원(+30.3%)	-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 특별공급 신설, 주택 우선 공급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 결혼전 특공당첨 이력 배제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 8,887억 원(+78.1%)	- 부모급여 지원액 확대 - 다자녀 가구 첫만남 이용권 인상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504억 원(+1,70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 - 난임지원 강화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신설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IBK 투자증권

그림 40. 저출산 대응 예산 및 증감 추이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IBK 투자증권

4. 저출산 탈피 정책 확대 필요성: 민간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

민간의 노력이 없이는
구조적인 저출산 해결불가

출산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추가적인 재정투자, 그리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출산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시행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재정보호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에서는 현실적으로 민간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으로 개선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정부의 역할

- 1) 저소득계층을 위한 대책
- 2) 민간 유인 동기 유발
- 3)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
- 4) 출산 저해 요인 제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고, 민간에서 구조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선순환 구조로 안정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계층을 위한 사회전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기에 저출산에 온전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1) 저소득 계층을 위한 출산 대책 마련, 2) 민간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 유발, 3)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모델의 개발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4) 근본적으로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절대적 지원 확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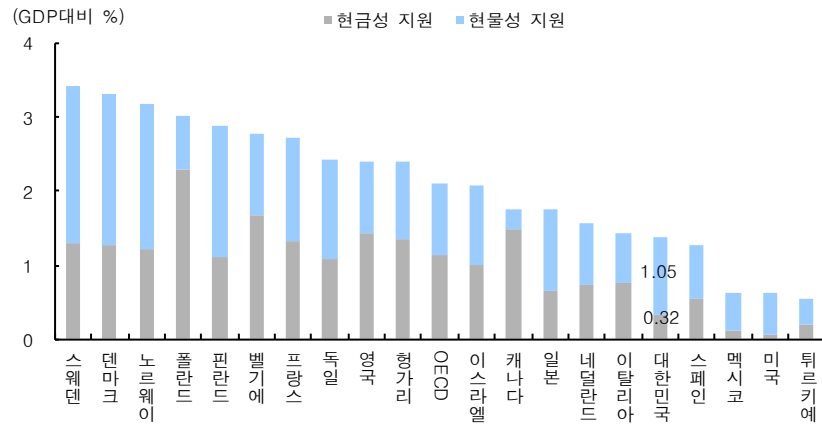
정부의 공적지출 미미
GDP 대비 지출비중
OECD 평균 2.1%
대한민국 1.6%
(현물 1.1%+현금 0.5%)

국내 저출산 해결을 위한 관련 투자는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수준은 GDP 대비 1.55% 수준에 불과해 OECD 평균 2.1%와 비교할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주요 국가 중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비교할 때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금지급 기준으로 보면 더욱 낮다. 현금성 가족에 대한 공적지출은 2019년 기준 0.32%에 불과하다.

동 시기 OECD는 1.12%로 국내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현금기준 공적지출 GDP 비중은 0.46%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 수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물지급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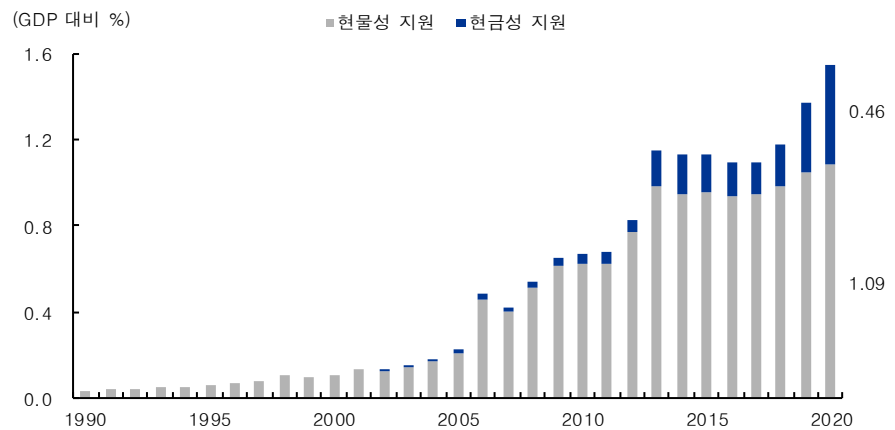
2024년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금지급을 늘릴 경우 출산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2조 원이다. 국내 한 해 예산 규모가 670조 원 규모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1. OECD 주요국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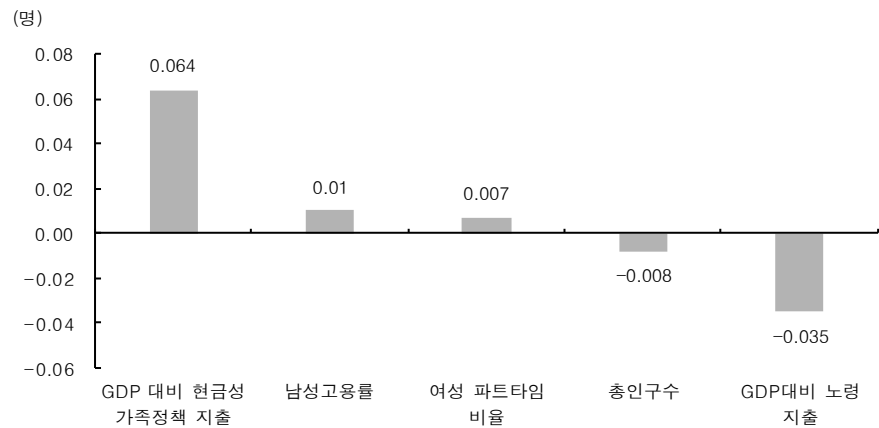
자료: OECD, IBK 투자증권

그림 42. 대한민국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 추이



자료: OECD, IBK 투자증권

그림 43. 주요 항목별 1% 증가 시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자료: FKI, IBK 투자증권

주) OECD 국가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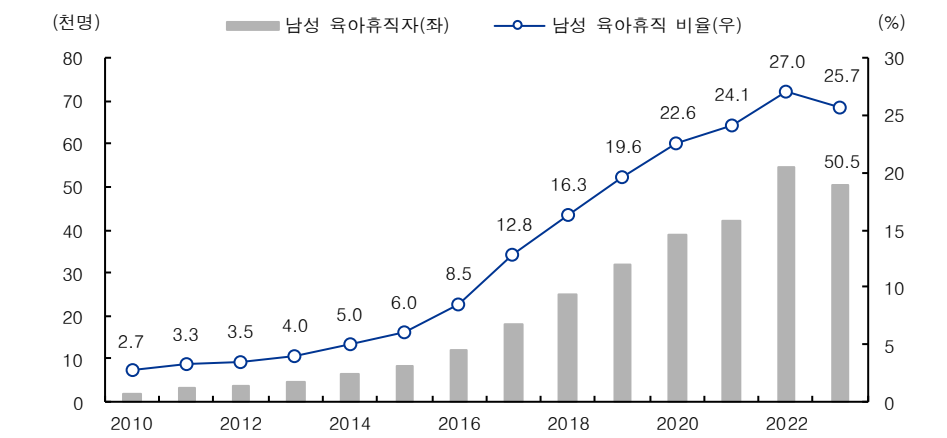
남성의 육아 참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육아에 대한 개념을 엄마에서 아빠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아빠의 달 시행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등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21.2%에 달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인 것이다.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확대 및 소규모 기업 사용률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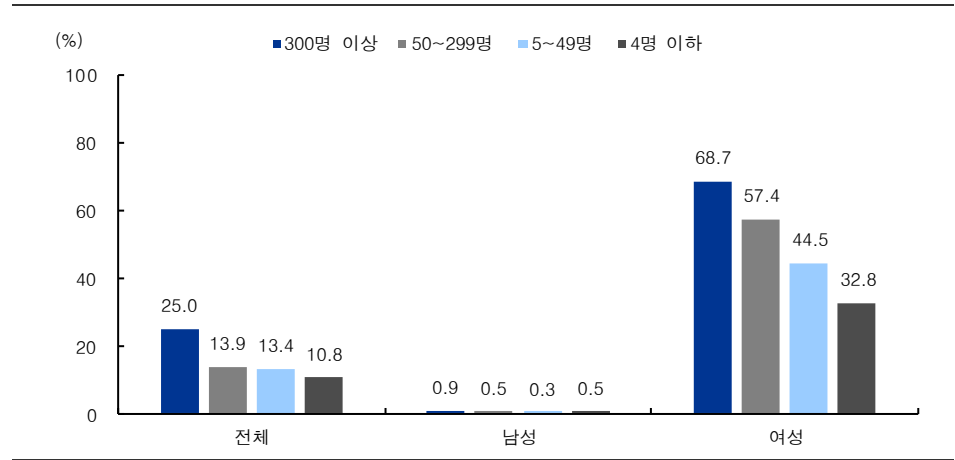
하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치로 판단한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을 보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육아 휴직을 못 쓴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성 육아 휴직의 소득 대체율이 OECD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까지는 정책적 지원이 미미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남성의 소득 대체율(육아휴직 급여)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인상시킬 필요가 있고(현재 초기 3개월 80%: 상한 150만원, 이후 50%: 상한 120만원), 소규모 기업에서도 남성 육아 휴직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44. 남성 육아휴직자 및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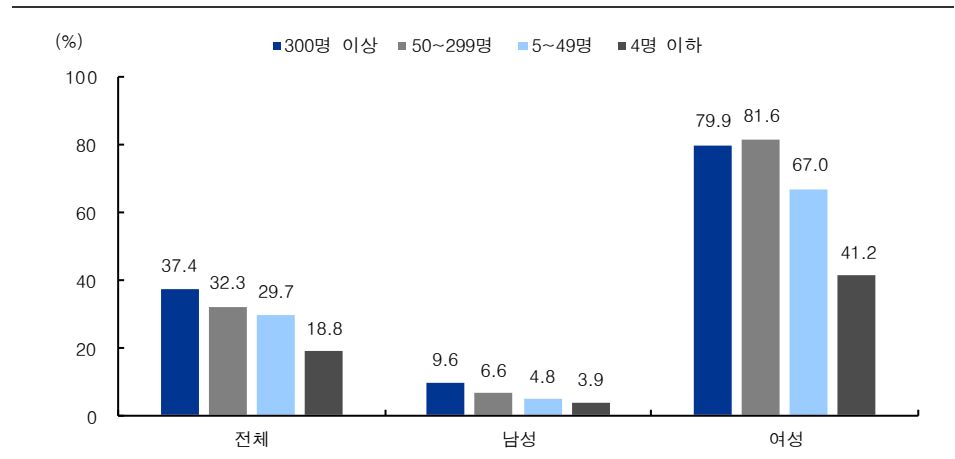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45.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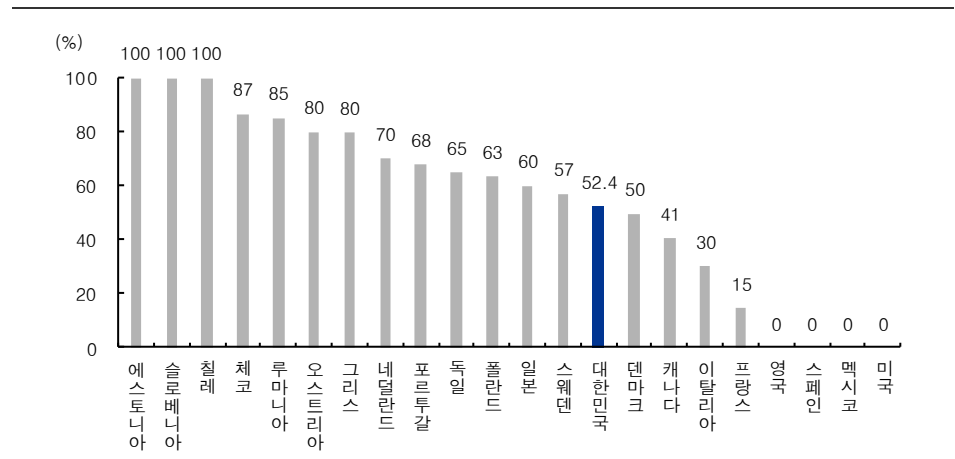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46.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2023년 잠정)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47.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상·하한 미포함)



자료: OECD, IBK 투자증권

민간을 이용한 정책의 확장

생산인구 감소의 문제점

- 1) 노동력 감소
- 2) 정부재정 악화
- 3) 투자감소, 소비 위축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이외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혼인 및 출산을 주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자리 그리고, 거주비용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혼인에서 출산까지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경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교육 시장의 편중, 높은 거주비에 따른 부담 존재로 개선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높은 거주비용은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실제로, 지역별 합계출산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 중 전국대비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불과하며, 이외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의 특징은 광역권을 이루고 있는 도시라는 특징을 가진다.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거주비용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집중된 산업구조와 거주비용 분산은 필수

이에 정부는 집중된 산업구조 및 거주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방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 확충, 주거지역 확대 등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GTX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거주지를 분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GTX의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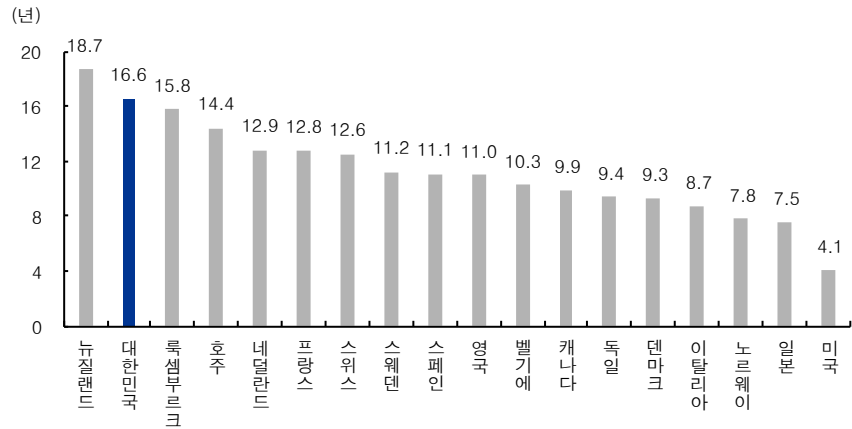
- 1) 경제활동 분산 X
- 2) 수도권 이외 확산 X
- 3) 부동산 가격 자극

하지만,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 경제활동과 생활환경을 분리시키는 정책에 불과해 산업 집중도를 분산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2) 이로 인해 서울 및 그 근교에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3) 반대급부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거주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혜택을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본사 이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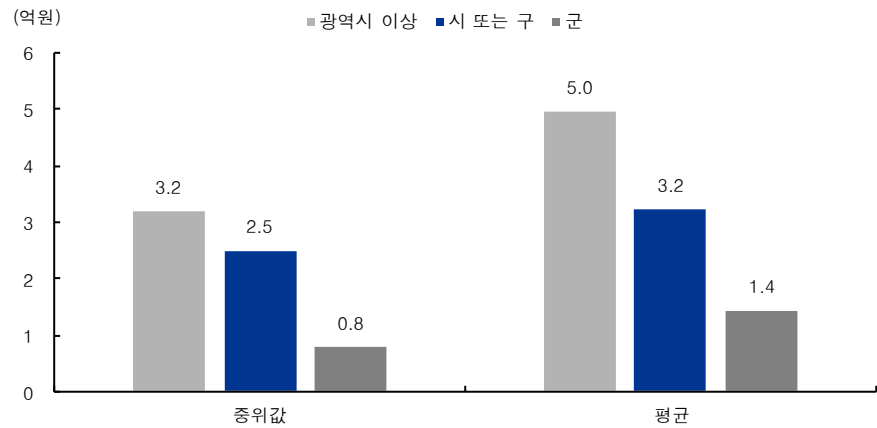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산업구조 분산을 통한 거주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 구조적 문제(저출산, 지방소멸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 당사에서는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사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림 48. 가구별 가처분 소득 기준 주택 구입에 걸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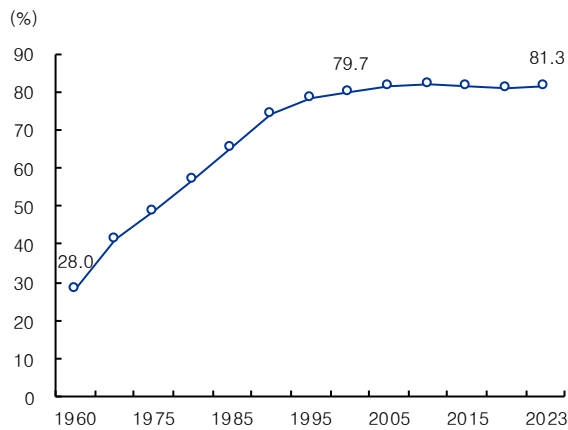
자료: OECD, IBK 투자증권

그림 49. 지역별 평균 주택가격(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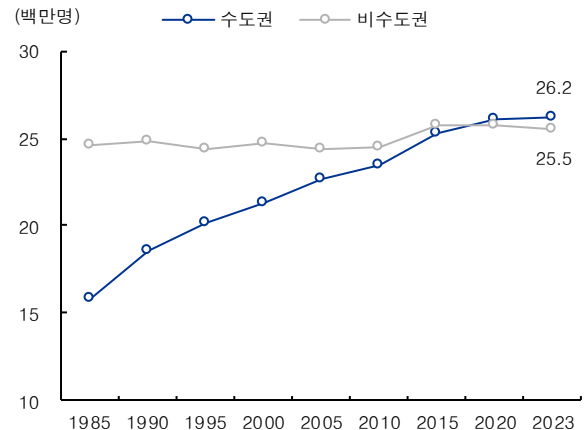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50. 도시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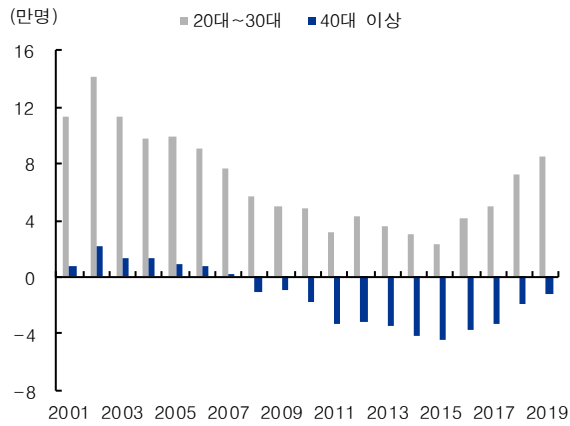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주: 도시화율은 동 거주자 기준

그림 5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인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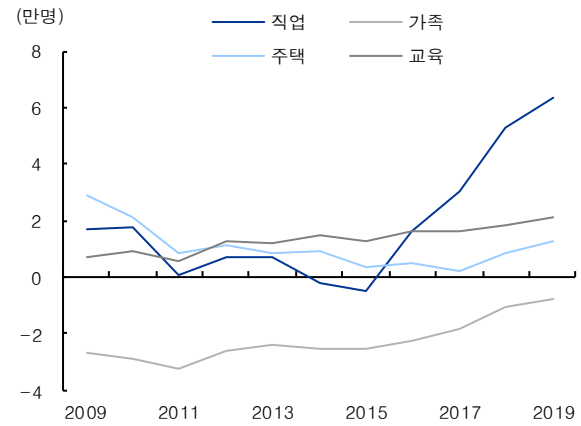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52. 수도권 연령대별 순이동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53. 수도권 전입사유별 순이동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5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수도권 확장)



자료: 국토교통부, IBK 투자증권

민간 저출산 정책에 적극적 지원 필요

민간 저출산 대책은
적극적으로 확대중

우리은행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난임치료 지원, 육아휴직 기간을 2년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영그룹은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GS건설은 난임시술비와 산후 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 어린이집 운영 및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

다만, 정부의 대응은 아쉬운 상황이다. 민간기업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정부 지원이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부영그룹이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의 세제적 혜택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한 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귀속되는 현금적 지원은 이보다 작은 수준이다. 민간과 정부의 엇박자로 인해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 민간 지원 필요
1) 저출산 정책 세제 지원
2) 민간 정책 정부 예산
3)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당사에서 생각하는 적극적 지원이란 1) 민간기업의 저출산 정책 참여를 위한 세제 지원과, 2) 민간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지원키 위한 정부 예산 편성, 3) 기업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의 마련이다.

표 16. 주요 기업들의 저출산 지원정책

기업명	세부내용
우리은행	- 추가 유급 출산휴가 20일 제공 - 난임 치료 휴가 3일 및 불임 휴직 1년 제공 등 -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3년) 제도 도입
부영그룹	- 출산한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 지급 - 대학 학자금 및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등
크래프톤	- 출산한 자녀 1인당 6천만원, 이후 재직 중 매년 500만원 씩 총 1억 원 지급 - 난임 치료 휴가, 임신·육아기 탄력 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 보육수당 등
롯데그룹	- 자녀가 있는 임직원(여성)에 자동으로 육아휴직 부여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및 시술비, 휴게실 등 - '자녀입학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자료: 각 사 발표, 언론보도, IBK 투자증권

5.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제안

산업구조 분산의 필요성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분산 정책이
중요

저출산은 결국 환경과 거주비용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산업구조 분산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분산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근본적인 동기유인은 민간이 이끌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프라 및 제도는 정부가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 지방 이전 정책 제안
1) 각종 지원, 인프라 건설
2) 최대주주와 기업에 혜택
3) 세제 혜택 강화

당사에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각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1)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인프라 건설에 힘을 쏟고, 2) 최대주주 혹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3) 기업이 제공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에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구조적 한계성 존재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거주비용과 소득이라는 양축을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원론적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단순한 형태 혹은, 서울 외 거주지를 확장하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면 선순환적인 구조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구조 분산 → 거주비용 감소 → 지방경제 활성화 → 고용시장 확대 → 출산율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온전한 지방 이전을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 생각한다.

그림 55.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선순환구조



자료: IBK 투자증권

주주와 기업에 대한 직접적 혜택 제공 필요

주주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 필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당사에서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주주에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한시적 감면과 지방이전에 따른 기타 비용등을 보전함으로써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지방 이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 및 긍정적 효과 기대

지방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청년층 유입에 따른 지방소멸과 고령화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이 중 일부를 **출산 장려 대책** 및 **관련 인프라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면 중앙정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 인구유입
↓
출산율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유입 → 출산율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과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공공 부문 종사자의 지역 간 재배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소득 이전의 따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업연구원 백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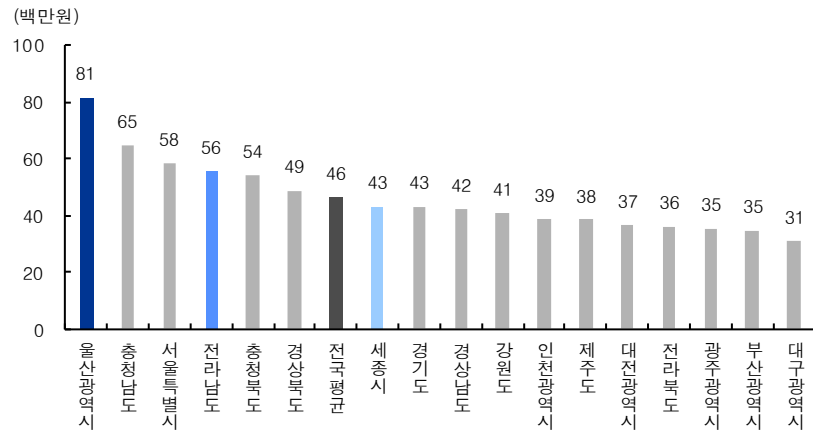
생산시설 밀집,
이에 따른
높은 소득수준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

반면, 우리는 성공 케이스를 울산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울산의 경우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2023년 1인당 GDP는(지역내총생산) 약 0.8억 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자동차 및 조선업 중심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공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 0.55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2, 울산은 0.814로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은
긍정적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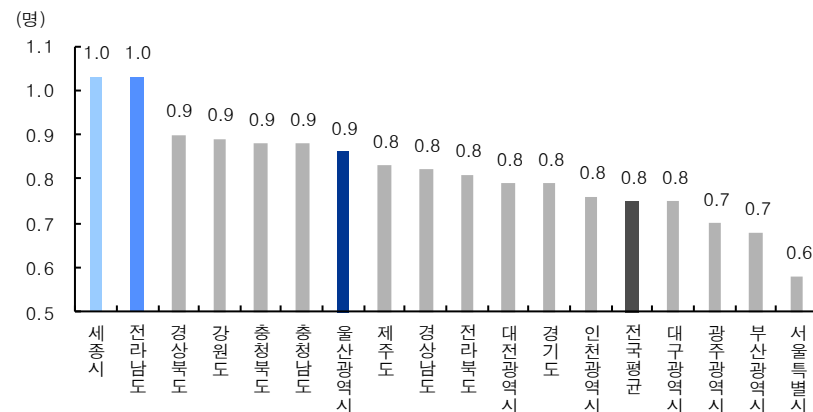
세종특별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0.4억 원으로 평균대비 낮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은 0.971로 전남에 이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그림 56.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 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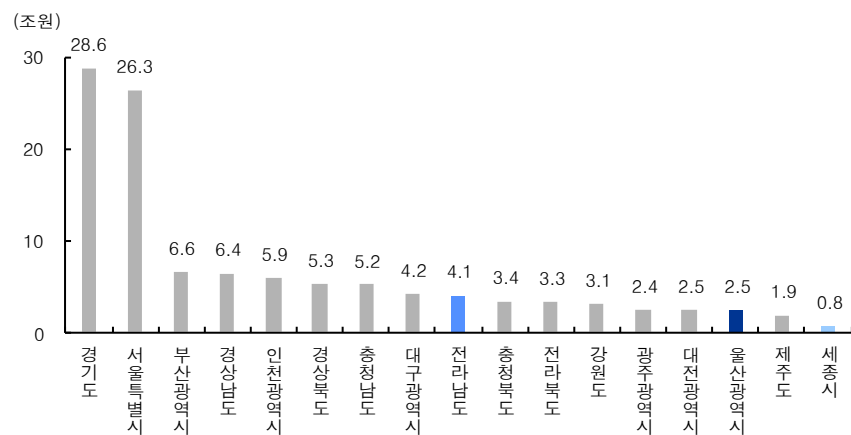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57. 시도별 출산율 비교(2024년 잠정치 기준)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그림 58. 시도별 지방세 세입(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기업 분산화는 전국적

기업 이전은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 관점이 필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경기권에 근접한 지역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격차를 두고 관련 혜택을 차별화시켜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지만, 지역별 유인 효과를 차등화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면 관련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한다.

단순 이전이 아닌
이전을 통한
집적경제 효과가 중요

KDI가 2023년에 분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는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집적경제의 효과가 발현될 때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투자자 산업 구조별, 혁신도시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인구와 소득의 외생적인 증가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혁신도시에서 제조업이 위축되거나 미약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산비용 상승(인건비 + 고장비 등)을 유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충분한 주택공급과 더불어 정주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동 파급효과는 크다는 것이다. 동 분석 자료는 공공기관 이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17.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2022년 기준)

혁신도시	세부 행정구역	개발 유형	이전 기관(개)	이전 인원(명)	사업비(억 원)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재개발	13	3,741	4,127
대구	동구	신시가지	10	3,191	14,501
울산	중구	신시가지	9	4,039	10,390
강원	원주시	신시가지	13	4,339	13,900
충북	음성군, 진천군	신도시	11	3,973	8,000
충남	내포신도시	신도시	8	3,493	9,153
전북	전주시	신도시	12	6,083	17,879
광주·전남	나주시	신도시	16	9,825	14,574
경북	김천시	신도시	12	4,872	6,774
경남	진주시	신도시	11	3,570	7,328
제주	서귀포시	신시가지	6	407	1,950
합계			110	46,185	98,979

자료: 국토교통부, IBK 투자증권

표 18. 공공기관 이전 단계별 경제 파급효과 시나리오 분석

(단위: %)

구분	단계별	고용				생산금액		
		합계	민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단기	1 단계: 공공부문 종사자 이전	2.08	0	-2.19	1.51	0.09	-0.71	1.29
	2 단계: 인구(민간부문 종사자)의 지역간 이동	2.37	0.31	-1.86	1.80	0.04	-0.73	1.20
	3 단계: 정부투자	3.65	1.66	-0.27	2.99	1.38	0.77	2.28
장기	4 단계: 제조업 내 집적경제 효과	3.52	1.52	-0.41	2.85	1.53	0.95	2.42
	5 단계: 제조업-서비스업 간 집적경제 효과	4.60	2.66	0.83	3.92	3.47	2.91	4.32

자료: KDI, IBK 투자증권

표 19. 혁신도시별 인구유입의 파급효과(5 단계 기준)

(단위: %)

혁신도시	고용				생산금액		
	합계	민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제조업	서비스업
부산	0.01	-0.44	-0.55	0.36	-0.3	-0.37	-0.19
대구	1.97	1.44	-1.06	0.35	1.6	1.39	0.02
울산	4.99	3.95	4.08	3.01	5.3	5.11	2.02
강원	18.9	-1.45	-1.56	16.31	20.68	5.13	20.06
충북(진천)	17.56	11.1	0.19	6.27	25.42	1.55	24.05
충북(음성)	11.7	8.19	1.86	1.66	11.06	3.11	7.74
전북	10.75	6.66	1.24	2.85	8.7	2.46	4.78
광주·전남	55.73	19.6	-0.96	37.07	45.4	-2.07	47.46
경북	24.57	9.03	1.09	14.45	18.63	3.06	18.06
경남	12.89	0.22	0.24	11.69	7.4	2.36	14.16

자료: KDI, IBK 투자증권

Insight 2

저출산 정책의 수혜는 제한적

저출산 관련 산업의
수요 기반 축소는 불가피

저출산은 한국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과 산업 전반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 대응을 직접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산업들은 수요 기반이 축소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장기적 성장 산업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유아용품, 교육 등
중장기 수요 감소

대표적으로 유아용품, 교육, 보육, 주택 등 정책 수혜가 기대되던 산업들조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 서비스 확대는 오히려 민간 기업의 시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급증에 따라 사립 어린이집 수가 감소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산업의 자생적 성장 여건이 악화되었고, 민간의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출산율 하락
→ 저연령층 인구 급감
→ 관련 사업 구조 조정

또한, 출산율 하락은 인구 구조 중에서도 특히 저연령층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산업 수요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수는 2000년 400만 명에서 2024년 2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 학원, 유아용품, 아동 의류, 콘텐츠 산업 등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사교육 시장 역시 1인당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규모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유아·아동 대상 콘텐츠, 장난감, 키즈카페 등도 사업 구조 조정에 들어가는 등 생존을 위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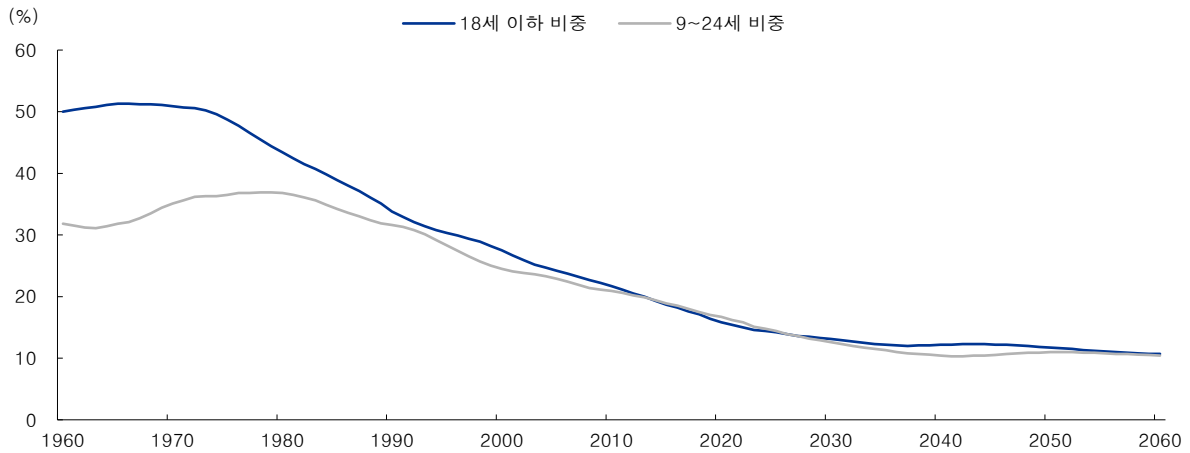
돌봄, 교육, 보건 등이
공공 영역으로 편입되어
민간 기업 성장 가능성 축소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돌봄, 교육, 보건 등 주요 서비스가 공공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민간 기업의 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2009년 5%대에서 2024년 40% 이상으로 급증했고, 이는 사립 어린이집의 폐업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장도 민간 프리미엄 조리원 시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정책의
민간 수혜 가능성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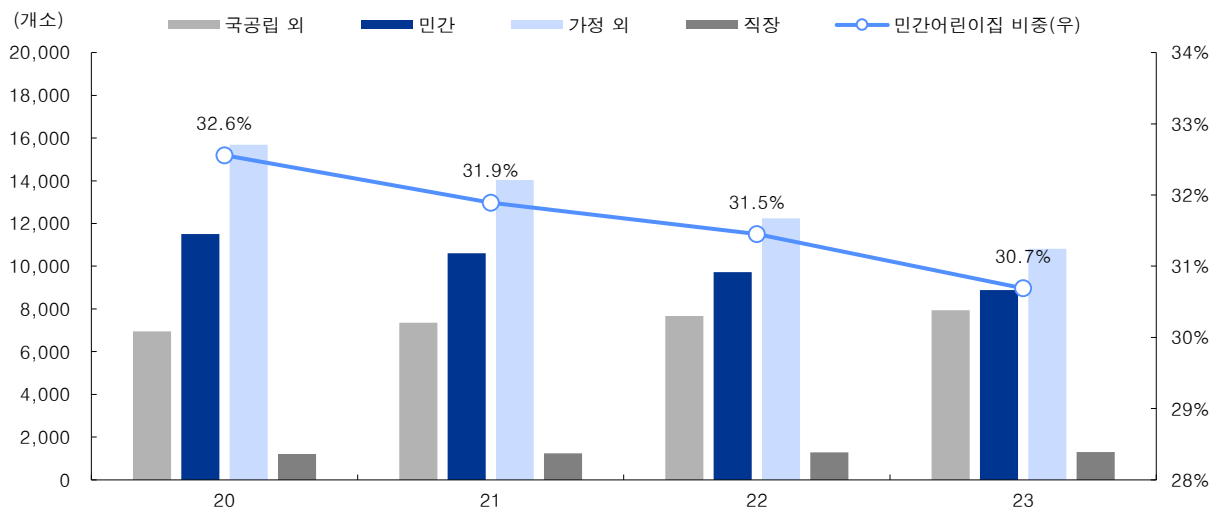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저출산 정책은 사회 안정망 강화에는 기여했으나, 관련 산업의 성장성과 기업 수익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민간기업이 해당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산업 전반에는 정책 수혜보다는 구조적 재편과 생존 전략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림 59. 한국 청소년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주) 2019 년 수치부터는 통계청 전망치

그림 60. 한국 어린이집 현황 및 민간 어린이집 비중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IBK 투자증권
 주) 국공립 외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개소수 합산, 가정 외는 가정, 협동 어린이집 개소수 합산

인구 구조 변화의 수혜는 고령화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산업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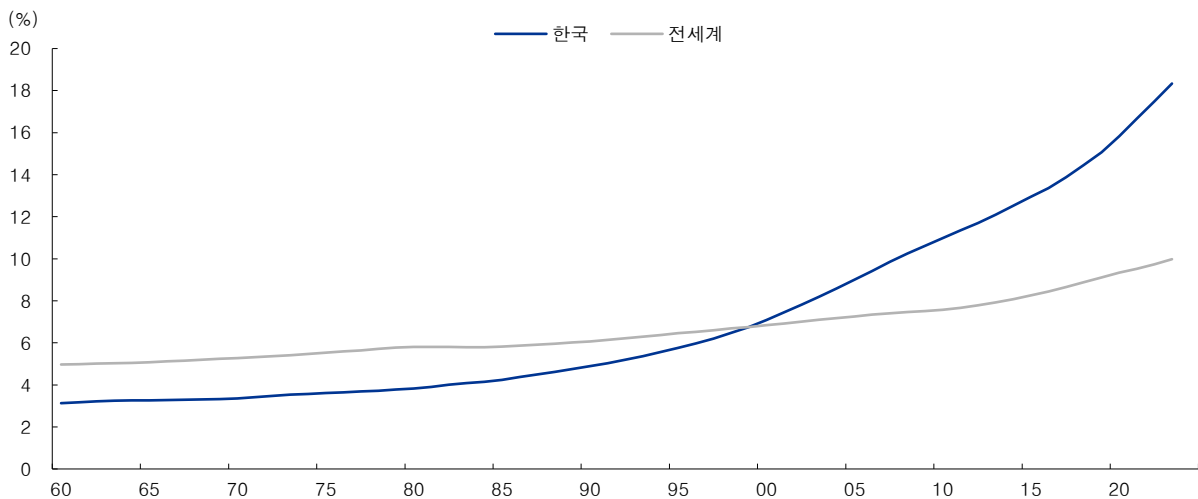
고령화는 저출산과는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을 형성하며, 헬스케어, 요양·간병, 실버 레저, 금융·부동산 등 고령자 대상의 산업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50년까지 17.9%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약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건강보조식품 등이 급성장 중이며, 요양 산업은 자동화 기기와 실버케어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실버 레저·관광 분야에서는 실버 리조트, 평생교육 등이 확대되고 있고,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버타운, 연금 특화 자산관리 서비스가 늘고 있다.

1) 노인 인구(Q)의 증가와 소비 세분화

한국 고령층 인구수
절대적으로 증가 중

한국의 고령층 인구는 절대적인 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활동적이고 소비 여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스마트워치, 혈압계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관절보호 신발, 간편식, 저자극 화장품 등은 대표적인 소비 품목이다. 또한 이들은 문화·여행·학습과 같은 여가 활동에도 적극적이며, 실버 커뮤니티 수요도 늘고 있다. 인구의 Q 증가와 함께 이들의 세분화된 니즈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은 새로운 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림 61. 한국과 전세계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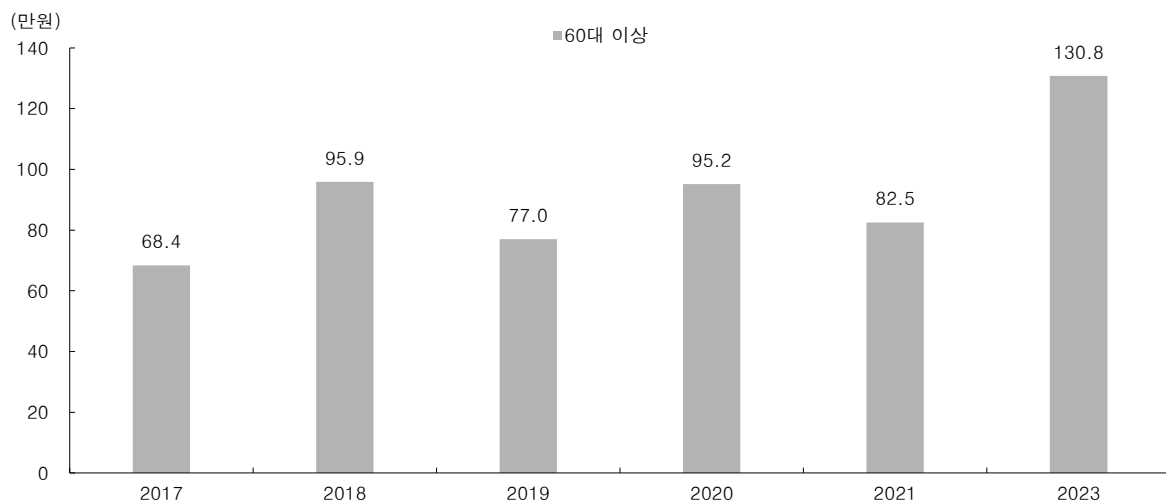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IBK 투자증권

2) 성인의 구매력과 고부가가치 소비 확산

30~60 대 성인,
평균 지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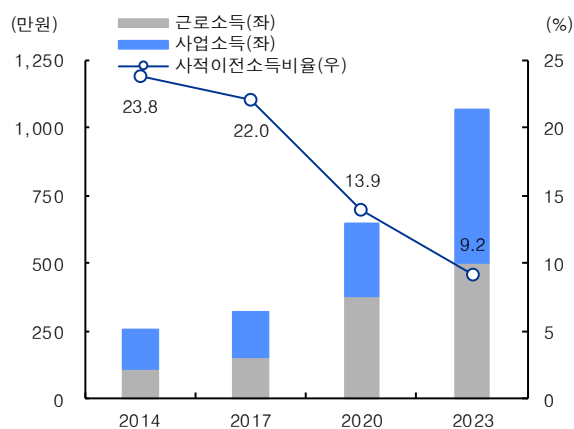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30~60 대 성인의 구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1 인가구, 딩크(DINK) 가구,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고령층 역시 과거보다 자산 기반이 견고하며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여가, 건강, 취미 등에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프리미엄 식품, 명품, 건강기능식품, 고급 가전·인테리어, 금융·부동산 상품은 주요 수혜 분야다. 따라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도 성인의 강한 소비력을 기반으로 고령층 중심의 맞춤형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62. 연도별 한국의 고령계층(60세 이상) 평균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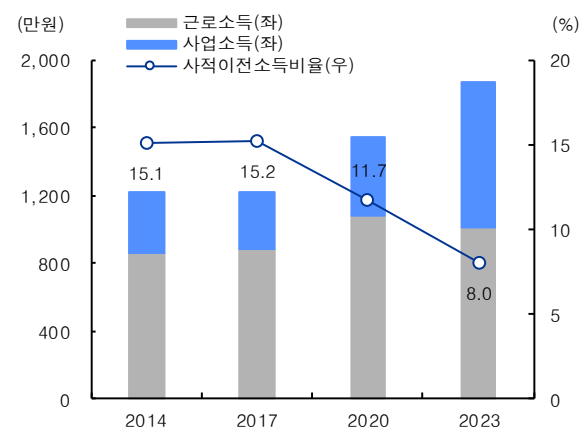
그림 63. 고령계층 소득자립도 추이(개인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주) 소득자립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

그림 64. 고령계층 소득자립도 추이(가구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IBK 투자증권

결론을 내리며... 저출산은 긴 호흡, 단기적으로 고령화 소비에 대한 고민 시작

당사에서 동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린 결론은 향후 미래시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 구조의 관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출산율을 회복하기는 어렵고, 주요 국가들 역시 출산율 하락 속도를 다소 지연시키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사에서는 2023년부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산업에 대해서 지속하여 언급하였다. 2023년 10월 16일 발간한 ‘당신의 가계경제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1) 의료 및 복지, 2) 개호식품, 3) 근거리 채널 시장과, 이후 2024년 11월 14일 발간한 ‘시니어 산업의 개화’ 보고서에서는 시니어 하우징 산업과 Care Service 시장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집필한 것이다.

향후 당사는 단기적으로 개화 가능성이 높은 고령화 소비를 좀더 심도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 시장 분석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정책과 시각에 대해서 리서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시니어하우징과 고령화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동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개화될 산업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투자자와 소통할 계획이다.

별첨 1. 프랑스

1) 주요 원인 분석: 정책 변화와 사회 트렌드

프랑스, 유럽내 출산강국
그러나, 최근 하락세 보임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혀왔으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총출산율을 거의 2.0명에 근접하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는 프랑스 역시 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인다.

2010년 정점을 찍고
저출산 추세로 들어선
배경

2010년 2.03명으로 정점을 찍은 총출산율은 2018년 1.88, 2022년 1.80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1.68명, 2024년 1.62명까지 더 내려갔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 배경에는 다음 요인들이 지적된다:

가족 지원금 소득 요건
도입 등 고소득층에 대한
수당 축소

— **가족정책의 일부 약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보편적 가족 지원금, 세금 공제 등 풍부한 출산장려 복지를 제공해왔지만, 2014년 이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일부 수당 축소 등 정책 후퇴가 있다. 전문가들은 2014년 이후 가족정책이 다소 약화된 것이 최근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일부 가족 지원금에 소득요건이 도입되어 다자녀가구 지원이 축소된 바 있다.

청년 실업률 증가 및
주거비 상승이
출산 부담 가중

— **사회·경제적 요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와 주거비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출산 시 경력단절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출산 연령의 상승(평균 초산 연령 30세 이상)으로 가임기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분위기 형성 등으로
다자녀 가정 희소화

— **가족 형태와 가치관 변화:** 프랑스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최근 출생아 중 약 65%가 혼외출산, 결혼 여부가 출산에 큰 제약은 아니지만,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은 선진국 공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관련된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아이 수를 적게 두면서 양육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 그리고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도 예전보다 희소해지고 있다.

2) 주요 출산율 제고 정책과 내용

가족 지원 정책 기조:
보편성과 관대함

프랑스는 1930년대 가족 지원금 도입 이래로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전통이 매우 강하다. 출산장려(Pro-natalist)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모두 목표로 한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보편성”과 “관대함”으로 유명한데, 2000년대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사회 변화에 맞게 제도를 조정해왔다. 주요 정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족 지원금
- 2) 출생수당
- 3) 세금 부양 공제

— **출산·육아 수당 및 세제 지원:** 프랑스는 가족 지원금(두 아이 이상부터 월 지급)과 출생수당(출산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소득에 따른 세금 부양공제(가족 quotient)를 통해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을 경감해준다. 2004년에는 여러 수당을 통합한 영유아수당(PAJE) 제도를 도입하여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도 약 6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2015년 이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족 지원금 지급액을 줄여 재정 형평을 도모했다.

- 1) 출산 전후 유급 휴가
- 2)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 사용
- 3) 3개월 출생 휴가 도입

— **육아휴직 및 부모휴가 제도:** 산모는 출산 전후 16주(다자녀 최대 26주)의 법정 출산휴가를 사회보장제도에서 정한 상한선의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배우자(부군)는 2002년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종전 14일이던 것을 2021년부터 28일로 늘려 받게 되었고, 이중 7일은 의무사용토록 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한다. 출산 후 부모 중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 제도도 최대 3년까지 존재하며, 둘째 이상 아이 경우 일정 기간 아이 돌봄 지원금(CICA)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활용은 주로 어머니들이 해왔고 경력단절 우려가 있어, 2024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을 대체할 새로운 “출생 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 각각 3개월씩 유급휴가(통상임금 50%, 상한 1,900유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로써 부모가 첫 1년간 6개월까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휴직 활용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 1) 3세 이상 무상교육
- 2) 3세 미만 공공 보육
- 3) 저소득층 이용료 낮춤

— **보육 서비스의 확충과 지원:** 프랑스는 공공 어린이집과 공인 보육사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3세부터 무상교육(유치학교)이 제공되고,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도 공공·비영리·가정 보육망 형태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보육의 질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지속해왔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보육 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낮춰 모든 계층이 보육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지원도 강화되어 2025년부터 한부모의 보육료 지원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 1) 다자녀 가족 카드 발급
- 2) 임대 혜택 지원
- 3) 난임, 불임 치료 지원

— **주거 및 기타 지원:** 다자녀 가구(3아이 이상)에 발급되는 가족카드를 통해 교통, 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국가 임대집 입주 시 가점 등 주거 지원도 이루어진다. 한편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모든 불임치료(IVF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아 의료비는 거의 전액 공적으로 커버된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직접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 철학이다.

3) 정책 효과와 평가: 유럽 최고 수준이지만 최근 감소

일관된 가족 정책의
효과로 유럽 최고 수준
출산율 유지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 최고 수준(총출산율 약 1.8~2.0명)의 출산율을 유지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해왔다.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은 총출산율을 0.1~0.2명 정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여러 세대에 걸쳐 인구 규모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1.5명 이하로 떨어질 때 프랑스는 2명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여왔고, 이민정책 효과와 더불어 인구 자연증가율도 플러스(+)를 유지해 왔다. 이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가족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201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의 시각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서서히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비판적인 시각도 나타난다.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6% 감소하며 194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총출산율도 1.68명까지 떨어져 2차대전 이후 최저 수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 육아 참여율 및
3세 미만 어린이집
이용률 상승을 위한 정책
수정 진행

- **정책 대응:** 마크롱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여 2023년 말 새로운 출생휴가 제도와 보육 서비스 개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책의 미흡한 부분(남성 육아참여 저조, 3세 미만 어린이집 이용률 정체 등)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가족정책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

- **한계와 과제:** 프랑스 가족정책도 완벽하지는 않아 계층 간 격차 문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공공보육 자리가 부족할 경우 저소득층 부모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반면, 고소득층은 대안을 구할 여력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육보조 개선, 한부모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복지의 사각지대 최소화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다.

별첨 2. 일본

장기 침체 속 저출산 원인과 종합대책 전개

1) 주요 원인 분석: 결혼·육아 기피의 구조적 배경

198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저출산

일본은 1.57 쇼크로 불린 1989년 총출산율 1.57명 충격 이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지만, 그 이후로도 출산율 저하는 지속되어 왔다. 2000년대 일본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지목된다:

여성에게 육아 부담
집중되어
일과 가중의 양립 어려움

— **경력단절과 양육 부담**: 기혼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문화가 지속되어 왔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육아와 일병행이 힘든 환경이 여성들의 출산 기피를 초래했다.

청년층 고용 불안정 등
결혼에 대한 부담 가중

— **경제적 불안정**: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 속에 청년층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평균 소득이 정체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커졌다.

양육비 및 주거비 부담
지속

— **주거 문제와 높은 양육비용**: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비용이 높고 어린이집 부족으로 사설 보육 이용 시 비용 부담이 크다. 또한 사교육 등 교육비 부담도 출산 결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혼 및 만혼 선호 현상
확산

— **의식 및 사회문화 변화**: 개인주의 가치 확산과 청년 세대의 결혼관 변화로 비혼 인구가 늘었다. 실제 일본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0년 27세대에서 2020년 29세대로 상승했으며, 만혼과 비혼 증가가 출생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 주요 출산 장려 정책 도입과 내용 (2000년 이후)

일본의 저출산 정책:
여성 지원 중심
→ 젊은 층 전반으로 확대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시행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여성 지원 중심이었다가 점차 젊은 세대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정책의 도입 시점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엔젤플랜: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추진

— **1994년 「엔젤 플랜」 수립**: 1.57 쇼크 이후 마련된 첫 종합계획으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확충 등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을 추진. 취업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 출산을 유도하려는 초기 대책이었다.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
기업의 협조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 추진됨

— **2003년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2000년대 들어 보육상담, 모자보건, 교육, 주택 지원 등 대책 분야를 포괄적으로 확대한 끝에, 2003년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을 토대로 내각총리대신(총리) 주재 저출산대책회의가 설치되어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대응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워라벨 향상)이 정책에 포함되어, 기업의 협조를 통한 근로문화 개선이 추진되었다.

아동 및 육아 지원 정책 및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확대

- **2010년대 재원 확충 및 육아지원 강화:** 2010년대에는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이를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등 아동 및 육아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3~5세 아동 전원과 0~2세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늘렸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일하는 부모 지원책도 강화되었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가족 지원 정책
도입

- **2013년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별 출산장려 사업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3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출산 지원사업(예: 결혼소개 프로그램, 주거·육아 지원 등)이 활성화되었고, 지역 육아지원센터 확충 등 지역밀착형 대책이 추진되었다.

초저출산 대응,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

- **2020년대 종합대책과 조직 개편:** 출생아 수 감소가 가속화되자, 일본은 2023년 기시다 내각에서 초저출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정부 전담기구)을 신설하고, 3년간 집중 대응하는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발표했다. 이 플랜에서는 젊은층 소득 증대(청년 취업 지원,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구조와 의식 변화를 위한 정책이 담겼다. 또한 2020년대 말까지 관련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한다는 목표 아래, 장기적으로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3) 정책 성과 평가: 출산을 추이와 한계점

2023년 출생아수
73만명:
일본 정부 예상보다
8년이나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 진행

2005년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15년경 1,45명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23년 다시 1,20명으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2016년 100만 명선이 붕괴된 데 이어 2023년에는 73만 명으로 더 감소하여 기록 작성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8년이나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가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저조한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 17%,
목표치 미달

- 정부의 노력으로 어린이집 확충 등 양적 기반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사회 분위기 변화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최근 17% 정도로 상승했지만(2021년 기준) 아직 목표치에 못 미친다. 기업 문화와 가정 내 성역할 분담 등에 대한 의식 변화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낮은 임금, 비정규직
등으로
청년층 경제적 부담 지속

-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낮은 임금,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다. 일본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새로운 대책들도 이러한 소득 및 일자리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질적인 젊은층 생활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가족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추가 하락 방어
인구 감소 속도 완화라는
현실적 목표 설정

- 다만, 일본은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노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총출산율의 급격한 추가 하락은 방지해왔다는 평가도 있다. 1,26명 안팎의 낮은 수준이지만 20여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에는 정책이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이 다. 정부는 향후에도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삼고 있다.

별첨 3. 대만

1) 주요 원인 분석: 만혼 풍조와 높은 양육비 부담

2017년 총출산을 1.13명에서 2021년 0.98명으로 급락했고, 2022년에도 0.87명에 그쳤다. 이처럼 극도로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지적된다:

- | | |
|-------------------------------------|---|
| 비혼, 만혼 등 급격히 확산 | - 비혼·만혼 증가: 전통적으로 대만에서는 혼인 내 출산이 일반적이라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도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결혼 연령도 상승하여 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30세를 넘었다. 이러한 비혼·만혼 풍조가 출생아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목한다. |
| 주거비 부담, 임금 정체 등 경제적 압박 증대 | - 경제적 압박(높은 생활비): 대만의 젊은 세대는 주택 가격 급등과 임금 정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타이베이 등 도시 지역의 집값이 매우 높아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이 어렵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필요한 공간 확보도 부담된다. 또한 아이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 등 양육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출산을 꺼리게 된다. |
| 공공 어린이집 부족, 민간 보육 비용 부담 등 양육 지원책 미흡 | - 양육 지원 미흡과 육아 부담: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육서비스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았다. 맞벌이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 어린이집 부족과 민간 보육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장 여성들이 “독박육아”를 우려하며 출산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남성의 육아 참여율도 낮았는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인식이 강했다. |
| 개인 자유의 중요성 증가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 - 청년층의 의식 변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일부 청년들은 자유와 자기개발을 중시하여 결혼과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이 없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는 가치관이 퍼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젊은 층 사이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2) 주요 저출산 대응 정책 (2000 년 이후)

- | | |
|----------------------|--|
| 2010년대부터 가족 지원 정책 추진 | 대만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시도해 왔다. 2010년대 초반 마잉주 정부 시절에는 “결혼 장려, 출산 장려, 양육 지원”의 3대 축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했고, 2018년부터는 행정원 주도 범정부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신생아 출산 지원금, 육아보조금 지원 | - 결혼 장려 및 출산 캠페인: 2010년경부터 젊은 층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지원금(俗称 “베이비 보너스”)을 도입했는데, 타이베이의 경우 아이 한 명당 NT\$20,000(약 80만 원)을 지급하고 5세 아동에게 최대 NT\$150,000의 육아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현금 인센티브와 홍보 캠페인은 2011~2012년 일시적으로 결혼·출생 급증을 이끌어, 2012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6만3천 명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 지속성은 제한적이었다. |

안성 육아휴직 비율 증가
탄력적 육아휴직 허용

- **육아휴직 제도 개선:** 대만은 2002년 육아휴직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부모가 아이 양육을 위해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고, 2009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월 임금의 60%) 지급을 시작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여성들이 휴직을 사용했으나, 남성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1년 최소 휴직 기간을 6개월 → 30일로 단축하고, 2017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비율이 2021년 19.0%에서 2022년 24.7%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탄력적 육아휴직’ 시범사업을 도입, 육아휴직을 하루 단위로 쪼개 쓰는 것도 허용하여 남성들의 사용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인 육아휴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아동수당 인상 및
양육수당 지급 등
보육지원 확충

- **양육비 지원과 보육 확충:** 2018년 행정원은 저출산 대책 프로젝트(2018-2022)를 시행하면서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시작했다. 이어 2022년 “0~6세 국정보육정책 2.0” 계획을 발표하여, 아동수당 인상과 보육 서비스 확충을 추진했다. 2022년부터 0~6세 모든 아동에게 월 NT\$5,000(약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청년 주거 지원,
보육인력 처우개선 등
정책 강화

- **청년층 지원 및 기타 정책:** 출산을 제고를 위해 청년 주거 지원(국가 임대집 공급 확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보육인력 처우 개선(보육교사 초봉 인상 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육아지원 전담 조직을 건강복지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부 내 인구정책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동성 부부의 시험관 시술 허용, 대신 아이 낳기 출산 제한 완화 등 출산 규제 완화 조치도 검토 중으로, 가족의 범주를 넓혀 출산율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비혼 출산 포용 정책 등은
동아시아 내 선도적인
사례

제도의 유연성이나 사회 변화에 대한 실험적 접근에서 특징이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나 난임 지원 확대,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 정책 등은 동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3) 정책 성과와 한계: 최저 수준 탈출을 위한 노력

2022년 출생아 수
역사적 최저치 기록

2012년 용의해(龍年) 특수와 정부 인센티브가 맞물려 출생아 수가 크게 늘면서 총출산율이 1.5명에 육박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13만9천 명으로 1950년대 기록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를 앞지르며 자연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컨트론타워 부재: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
발표

- **정책 효과의 제한:** 전문가들은 대만의 현행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프로젝트(2018~2022)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자, 대만 감사원 격인 심계부는 “주무 기관을 지정해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그간 대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컨트론타워 부재로 인한 비효율이 있었다는 반성이다.

금전적 지원이
실제 양육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

- **인센티브 수준 논란:**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이나 수당의 규모가 실제 양육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지원금으로 첫째 2만 NTD, 둘째 5만 NTD 등을 지급하지만, 이는 양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출산 의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싼 집값, 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금전 지원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긍정적 변화 조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도 있다. 남성 육아참여 문화가 자리잡아가는 것이 그 예로, 앞서 언급했듯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육아는 부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전보다는 경감되었기 때문에, 출산 희망은 높지만 형편상 미루던 부부들이 용기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난임 부부들의 출산 성공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책 혜택을 받은 계층에서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다양한 시도로
저출산 탈피 노력중

전반적으로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극심한 저출산을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국가이다. 아직 성과는 미약하지만 정책 실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업종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인식	연구위원	자산배분/ETF	6915-5472	kds4539@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해외주식	6815-5464	ckjins@ibks.com
권순호	연구원	Quant	6915-5667	snowkonn@ibks.com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화학/정유	6915-5671	t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김유혁	연구위원	미디어/엔터	6915-5673	yuhyuk.kim@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le1125@ibks.com
오지훈	연구원	조선/기계	6915-5662	jihoonoh@ibks.com

혁신기업분석부				
이건재	연구위원	소재·부품·장비/스몰캡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디스플레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음식료/유틸리티	6915-5658	kith0923@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IBK WM센터 역삼	02) 556-4999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강남	02) 2057-9300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